

반인들의 상식과 일치하지 않는지 보여주고 있다. 2005년 1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누리꾼들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 연대모임>을 구성하고, 2월 14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저작권법 불법복제운동으로서 14일부터 일주간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애국가 선물하기 캠페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애국가 배경음악 들려주기 캠페인 등을 벌였다.

문화관광부는 2005년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을 통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었던 우상호 의원은 10월 31일 별도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안들은 문화관광위원회 대안으로 합쳐져 2005년 12월 6일 상임위를 통과하였는데, △ P2P 및 웹하드 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의 의무화, △ 문광부 장관 등이 불법복제물을 수거, 폐기 및 삭제할 수 있는 명령권 부여, △ 저작권 위반의 비친고죄화 등 심각한 독

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이트(<http://blog.jinbo.net/ipleft>)를 구축하고 독소조항 폐기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5년 12월 29일에는 개정안 중 비친고죄 조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105명의 교수, 변호사의 서명을 받아 발표하기도 했다. 개정안 반대운동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거의 1년여 동안 국회 법사위에 계류시켰으나, 결국 2006년 11월 29일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저작권법 전면개정안 비판 토론회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2005년 12월 7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공정이용 일반조항 및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예외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이용 일반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저작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천영세 의원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17대 국

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저작권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어졌다.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위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 이용자 계정의 해지, 게시판의 폐지, 사이트 폐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문광부 장관에 부여한 것이다. '삼진아웃제'는 국제적으로 거대 음반사 등이 주장해오고 있지만, 입법의 선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2008년 10월 현재 국회에 발의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에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특허법 개정운동

클리백 강제실시가 불허된 이후에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강제실시를 이슈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2001년 11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에서는 의약품 접근권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 선언문의 요구에 의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2003년 8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의약품 특허를 강제실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 TRIPS 협정의 강제실시 조항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의약품 생산설비가 없는 나라(수입국)는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나라(수출국)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출국에서도 같은 의약품이 강제실시되지 않으면 수입국의 강제실시는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2004년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을 통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국내 법에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였지만, 특허청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려하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2005년 5월 3일, 특허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비록 특허청의 개입으로 근본적인 취지가 상당히 약화되기는 했지만, 최빈국들의 민중들에게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06년에는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에 참여하여 환자, 보건의료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였지만, HIV/AIDS 감염인(PLHA)의 프라이버시권이나 특허 독점 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지는 못했다. 2008년에는 글리벡과 같은 백혈병 치료제인 스프라이셀,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의 접근권을 위해 보건의료 단체들과 연대하였다. 스프라이셀은 제약사인 BMS가 연간 4000만원이 넘는 높은 약가를 요구하여 문제가 되었고, 푸제온은 제약사인 로슈가 약가에 불만을 품고 3년이 넘도록 약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 단체들과 정보공유연대는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2008년 10월 8일 로슈 규탄 기자회견

한미 FTA 반대운동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2년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도하개발어젠다(DDA) 대응팀>에 참여하는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국내 지적재산권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트립스(TRIPS) 협정이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협정에 의해 규정되기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은 국제적인 신자유주의 반대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2006년 초 갑작스럽게 한미FTA 협상 개시가 발표되면서, 한미FTA 반대 활동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의 2006년~2007년 핵심 사업이 되었다. 2006년 4월 11일,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등 6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http://nofta-ip.jinbo.net/)를 구성하고, 한미FTA 저지 범국본 활동에 결합하였다. 지적재산권 대책위는 미국이 체결한 FTA 협상의 지적재산권 분야를 연구하였으며, 같은 해 5월 10일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의견서'를 제작하여 외교통상부에 제출하였다. 이 의견서는 한미FTA 저지 범국본에서 제출된 의견서 중 가장 전문성을 담보한 의견서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후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문제를 대중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5월 24일~27일에는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 대중문화제>를 개최하였다. 대중문화제는 한미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 로렌스 레식 초청 특별 강연, 태국 감염인 초청 특별 강연, 도로시 키드 초청 워크숍, 한미FTA와 의약품에 관한 대중토론회, 한미FTA저지와 PLWHA 건강권 쟁취를 위한 국제연대 세미나, "지식을 민중에게로" 지적재



<한미FTA 저작권 협상, 대략난감> 릴레이 만화 캠페인

산권 강화반대 투쟁영화제 등으로 이루어졌다.

5월 22일~7월 11일까지는 한미FTA 반대 지적재산권 쟁점 릴레이 만화 캠페인 "한미 FTA 지적권 협상, 대량난감"을 통해 총 14회에 걸쳐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쟁점을 컬럼과 만화로 제작하여 알렸다. (http://blog.jinbo.net/nofta_ip) 이는 지적재산권 이슈가 일반 대중들에게 매우 어려운 주제임을 감안한 것이다. 9월~11월에는 매주 토요일, 한강, 청계천 등지에서 시민문화제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11월 16일에는 성공회대 피츠버그홀에서 '저작권 강화와 공동체의 위기 -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창시자인 리처드스톨만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한미FTA 협상과 관련한 내용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저작권, 의약품 특허 등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년이 넘게 진행된 저지 투쟁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 2일 결국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우 비위반제소를 제외한 모든 의제(의약품 자료독점권 품목 확대, 허가-특허연계, 소리-냄새 상표 인정, 저작



한미FTA 협상 타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권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기술적 보호조치 확대, 비친고죄 적용 대상 확대, 법정손해배상액 제도 도입, 형사처벌의 양형기준 도입 등)가 미국 정부가 요구한 대로 타결되었다. 이후 2007년 8월부터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관련 법안들(특허법, 저작권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상표법)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타결 직후 지적재산권 대책위는 한미FTA 협상의 지적재산권 조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작업에 집중하였다. 2007년 5월 2일 한미 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평가 토론회, 5월 28일 한미 FTA 저작권/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6월 4일 정부의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 조항'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6월 11일 한미 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검토 의견서 발표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6월 20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한미 FTA 협정문 종합분석 보고서』 발간에 맞춰,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국회에서 한미FTA 협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2007년 5월부터 EU와의 FTA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한EU FTA의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해서도 대응하였다.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의제로 제안된 것은 공연보상청구권, 추급권, 의약품 자료독점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 집행규정 등이었으며, 이 중 추급권과 의약품 자료독점기간 연장은 EU가 철회하였다. 지적재산권 대책위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5회의 릴레이 컬럼을 발표하였으며, 11월 22일 한EU FTA 협상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의견서는 계간 <엑트온> 2호에 게재되었다.

2008년에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ACTA는 지적재산권의 국경 간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복수국가 무역협정으로 미국, EU, 일본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들이 ACTA와 같은 복수국가 협정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WTO TRIPs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다자간 기구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 협정 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ACTA는 의제나 협정 초안 등이 공개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국제 시민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은 ACTA 협상이 의약품 접근권,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ACTA 협상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2008년 9월 15일, ACTA 협정의 공개를 요구하는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행동에 함께 하였다.



정보공유라이선스와 열린문서 캠페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6월부터 홈페이지 콘텐츠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이용, 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홈페이지 카피레프트(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이 캠페인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 뿐,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범위나 책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카피레프트 운동을 시작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외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한 대안 라이선스로서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모두 약관 형태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공유정보영역 확대와 전자정부 토론회 (2003년 9월 1일)

정보공유연대는 2002년부터 공개 라이선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2004년 10월 4일 정보공유라이선스를 발표하였다. (<http://freeuse.or.kr/>) 2005년 10월에는 좀 더 개선된 버전인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발표하였다. 정보공유라이선스

는 허용/영리금지/개작금지/영리금지·개작금지의 4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라이선스 개발부터 업그레이드 작업에 같이 참여했으며, 진보블로그와 진보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 등에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블로거들에게 라이선스 채택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2008년 7월 10일에는 문서 교류를 위한 파일 형식으로 텍스트(TXT), PDF, 오픈다큐먼트포맷(ODF) 등 공개된 파일 형식을 이용하자는 '열린문서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정보인권 대중화를 위한 노력

정보통신정책 혹은 정보인권의 주요 내용을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2001년부터 매해 개최된 전국정보운동포럼은 정보운동 활동가들의 교류의 장이자 교육의 장이기도 했다.

정보운동 주요 이슈에 대한 강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01년 9월 15일~10월 19일, 표현의 자유, 감시와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 인터넷 거버넌스, 사회운동

의 정보화 등 5개 주제로 한 달동안 '정보화와 인권' 정보운동 강좌를 열었다. 2003년 7월에도 '정보인권강좌'를 개설하였으며, 2004년에는 2월 6일에서 4월 16일까지 정보인권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5년 9월 23일~24일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05 대학정보인권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2002년 11월 21일 개최된 '정보기본권 현안과 과제' 워크숍

한편, 정보인권 이슈를 쉽게 알리기 위한 대중 교재를 만들어 왔다. 처음 시도된 것은 2002년 11월 30일 발간된 <내가 꼭 알아야 할 정보화 시대의 인권> 교재이다. 표현의 자유, 자기정보 통제권, 반감시권, 정보공유의 권리, 정보접근권 등의 주제로 이루어진 5권의 핸드북 형태로 발간되었다. (<http://rights.jinbo.net/>)

2007년 12월 12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인권단체협력사업'으로 '정보인권에 접속하다!'라는 제목의 정보인권 만화 사이트를 개통하였다. (<http://toon.jinbo.net>) 이 내용은 계간 <액트온> 3호를 통해 발간되었다.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저작권, 특허, 정치적 자유, 노동권, 평등 등 각 인권 영역이 정보화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논쟁과 그에 대한 진보적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만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를 단행본으로 출판할 계획이다.



정보인권 만화 중 '표현의 자유'

정보운동 포털 '액트온'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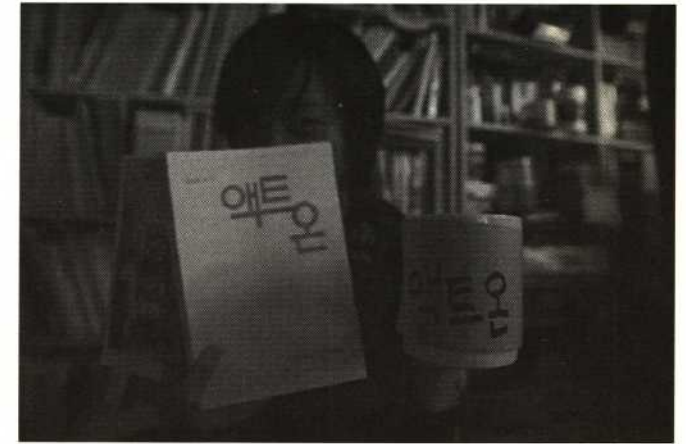
2006년 12월 40호를 끝으로 월간 <네트워커>를 종간한 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온라인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는 크게 3가지 방향 속에서 추진되었다.

첫째는 정보운동 포털 '액트온'(http://acton.jinbo.net) 사이트의 구축.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그 동안의 정보통신운동의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이슈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자료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어떤 이슈에 대해 역사적인 맥락이나 관련 자료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위키'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제별로 쟁점, 주요 활동,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웹진 액트온의 발간을 통해 해당 시기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소개하고, 정보통신운동 메타사이트 구축을 통해 관련 블로거들의 포스팅과 폭넓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둘째는 웹진 '액트온' 발간. 이는 월간 <네트워커>의 역할을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온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발행 주거나 글의 분량 등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는 계간 '액트온' 창간. 오프라인으로 잡지를 발간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판단하에, 다만 발행 주기를 계간으로 바꿔 발행하기로 하였다. 계간 '액트온'은 웹진 '액트온'의 지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는 웹진과 오프라인 발행물의 독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더불어 매호가 단행본의 성격을

갖도록 '특집'을 두었으며, 특집 내용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연구 활동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웹진 '액트온' 주요 내용

- 제1호 2007년 5월 : 인터넷 수갑차고 체포되다
- 제2호 2007년 6월 :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우리가 잃은 것
- 제3호 2007년 7월 : 생체여권 들고 감시사회로 입국
- 제4호 2007년 8월 : 당신들의 저작권법
- 제5호 2007년 9월 : 임시조치? 인터넷 긴급조치!
- 제6호 2007년 11월 : UCC 다시보기
- 제7호 2007년 12월 : 2007년 대통령 선거와 정보인권
- 제8호 2008년 4월 : 위키랑 다시 시작해 볼까 해
- 제9호 2008년 5월 : CCTV님께서 보고계셔
- 제10호 2008년 6월 : 촛불 만난 미디어
- 제11호 2008년 7월 : 무명씨를 위하여
- 제12호 2008년 8월 : 2008년 정기국회 들여다보기

계간 액트온

- 제1호 (2007년 여름) : 여성주의 관점의 웹운동
- 제2호 (2007년 가을) :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전망과 평가
- 제3호 (2007년 겨울/2008년 봄) : 정보인권에 접속하다!
- 제4호 (2008년 여름/가을) : 인터넷의 미래와 망중립성

미디어 융합 환경에 대한 대응

최근 방통융합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전통적인 통신/방송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DMB, IPTV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UCC로 표현되는 포털의 멀티미디어 전략,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 정부조직과 법제의 개편 등은 모두 일련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02년 인터넷이 한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과 다르게, 방통융합이라 표현되는 통합미디어환경은 자본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진보넷에 두 가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 멀티미디어 중심, 그리고 멀티 플랫폼 환경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 대응. 둘째, 과거 통신(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서 벗어나 통합 지향적으로 변모하는 미디어 전반에 걸친 연구와 정책 개입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융합 환경에 대한 학습모임

2005년 7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같은 해 10월 27일 유추위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통합위원회'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하였다.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기구설립법안 작업을 하였는데, 이 법안은 '정보통신부에 의한 방송

위의 흡수 통합'이며, '정부의 방송 장악음모'라는 비판을 받았다.

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방송, 언론 노조 등을 중심으로 <시청자주권 공대위>가 꾸려져 대응을 하였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운동 영역의 단체들은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금까지 인터넷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으나, 통신산업이나 통신 영역의 공공성, 방송영역과 관련해서는 거의 개입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입장을 단시일 내에 정리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방통융합 환경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 및 연구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5년부터 관련 주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2005년 8월부터 미디어센터, 민주노동당,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모여 방통융합에 대한 학습 모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시청자주권 공대위와는 별도로 운영되었는데, 정치적인 대응 중심인 시청자주권 공대위와는 별도로 보다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융합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6년 8월부터는 진보네트워크센터, 미디어액트, 언론노조,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등이 <방통융합기구설치법 등에 대한 전략 구상 모임>을 구성하고 국무조정실의 방송통신융합 기구 법안 저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언론, 정보통신, 미디어 등 각 운동영역별로 의제를 정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및 IPTV 법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와 별개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내부 세미나를 구성하여 '통신서비스 정책'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미디어액트, 한국독립영화협회, 민중언론 참세상, RTV, 민주노동당, 문화연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장애인미디어교육네트워크 등과 함께 방통융합 TFT를 구성하여, 미디어 융합 환경의 공공성 의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물을 2007년 12월 『미디어 융합 시대,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가』라는 소책자 형태로 발간하였다.



② 미디어행동

2008년 1월 29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이 출범하였다. 미디어행동은 기존 방송·언론 운동, 시청자운동, 정보통신운동, 독립·대안 미디어 운동 진영을 포괄하는 연대체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송 및 통신 영역 규제기관도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로 단일화되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향후 융합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언론, 미디어 운동 단위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미디어행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2008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미디어행동 내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TF, 인터넷 통제 TF, 방송통신통합법 TF 등에 참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미디어행동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미디어행동 출범 기자회견

대한 입장 및 대응 마련을 위한 TF가 꾸러졌다. 시청자주권연대, 언론인권센터,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PD연합회, 공공미디어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참여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TF는 2008년 6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서> 발표하고 종결되었다. 인터넷 통제 TF는 2008년 촛불시위에 뜨겁게 덴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신설,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확대 등 인터넷 통제 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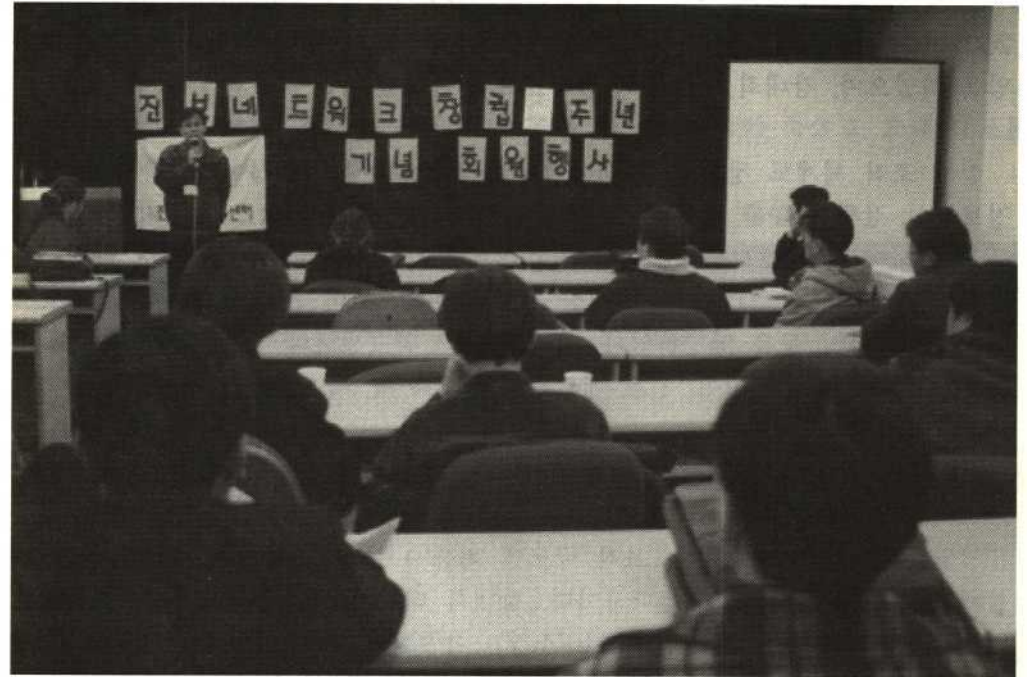
한편, IPTV 등 융합미디어가 등장하고 정부조직도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2008년 후반기에 정부는 '방송통신발전에관한기본법'을 입법화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디어행동 내에서는 '방송통신통합법 TF'를 꾸리고 대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조직체계의 변화

진보네트워크센터 발족식 및 창립총회는 1998년 11월 14일, 서울대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1층에서 개최되었다. 김진균(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이사회는 강정구(동국대 사회학 교수, 학술단체협의회), 김형준(참세상 전 운영자),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오세철(연세대 경영학 교수, 지식인연대), 유초하(충북대 철학 교수,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윤종현(변호사), 이갑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장창원(목사), 홍근수(목사, 향린교회)로 구성되었다. 조광희 변호사가 업무감사, 강영근 회계사가 회계감사를 맡았다. 1998년 12월 10일, 제1차 이사회에서 운영위원으로 강내희(중앙대 영문과 교수, 민교협), 강동진(민중의료연합), 김도형(변호사), 김명준(노동자뉴스제작단),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백찬홍(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이용근(노동네트워크), 이종희(지식인연대), 이철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장도리(학생네트워크), 정원오(학술단체협의회), 최경송(청년생태주의자KEY), 최인기(전빈련)를 선임하였다. 이종희 운영위원이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을 겸임하였다.

1999년 정기총회는 3월 12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1999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승인하였다. 1999년까지 초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은 조직/기획팀, BBS서비스팀, 웹서비스팀, 기술팀, 교육팀 등으로 구성되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홍보 및 이용자 조직화 사업, 참세상 BBS와 웹호스팅 등 서비스, 교육사업 등이 중심이었다.

2000년 정기총회는 3월 15일~21일, 온라인 총회로 개최되었다. 2000년에는 정보통신 정책 활동의 강화를 위해 정책실을 신설하였으며, BBS와 웹서비스를



진보네트워크 창립2주년 기념 회원행사

통합하여 온라인사업팀이 담당하였고, 교육팀, 기술팀은 유지되었다. 그리고 참세상 방송국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2001년 정기총회는 3월 3일, 한국여성민우회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김진균 대표가 유임된 가운데,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강내희(문화연대), 김지영(김지영내과원장), 김형준(참세상 전 운영자), 단병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오세철(노동자의 힘), 채만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최갑수(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홍근수(향린교회)가 이사로 선출되었다. 업무감사는 조광희 변호사가 계속 맡았고, 임원택(컨설턴트)씨가 회계감사로 선출되었다.

사무국은 회원 및 재정 등을 담당하는 조직운영팀, 인터넷사업팀, 교육팀, 기술팀, 참세상 방송국 등으로 2000년과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다만, 참세상 뉴스의 강화를 위해 참세상 뉴스 담당자를, 영문뉴스 사이트인 BASE21을 위해 BASE21 담당자를 두었다. 2001년부터 정보운동의 국제연대는 사무국장이 겸임하였고, BASE21은 사회운동의 국제연대를 지원하는 역할로서 자원활동가 및 단체와 함께 별도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2002년 정기총회는 2월 2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교육장에서 개최되었다. 2002년 정기총회에서 김진균 교수님이 2년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임을 하였으며, 강내희 이사를 신임대표로 선출하였다.

실무 조직 체계도 정책국, 미디어국, 기술국으로 새롭게 정비하였다. 정책국은 정보통신 정책 이슈를 맡았고, 미디어국은 기존의 참세상 뉴스와 참세상 방송국을 통합하여 BASE21까지 포함한 진보네트워크의 언론/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기술국은 참세상 공동체 관리, 서버 관리, 기술 개발, 웹호스팅 서비스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즉,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 영역이 크게 정보통신 정책, 대안 미디어, 진보 네트워크의 구축 등 세 영역으로 규정된 것이다.

2003년 정기총회는 3월 2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003년 총회에서는 기존에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체제로 2원화되어 있던 것을 운영위원회로 단일화하였다. 조직 규모에 비해 너무 다층적 구조이고, 이사들의 실제 참여율도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내희 대표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였으며, 채만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이종희(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김형준(참세상 전 운영자), 강남훈(한신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명준(영상미디어센터 소장), 이성우(민주노총 정보화추진단 단장), 이용근(노동정보화사업단), 장창원(노동네트워크), 이은우(민변, 변호사), 남희섭(정보공유연대 IPLeft, 변호사)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

2003년에도 2002년과 마찬가지로 정책국, 참세상방송국(미디어국), 기술국 체제로 운영되었다. 영문뉴스 사이트인 BASE21은 운영을 중단하였고, 2002년부터 축소된 교육 사업도 중단하였다. 2003년에 창간된 월간 <네트워커>는 정책국에서 담당하였는데, 취재와 집필은 함께 하되 월간 <네트워커>를 전담할 편집장을 두었다. 또한,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네트워커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4년 정기총회는 2월 1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004년 총회에서 강내희 대표와 조광희 감사가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이종희 소장이 신임대표로 선출되었으며, 강남훈 교수와 이지선 변호사가 감사를 맡았다. 이종희 소장이 대표를 맡게 됨으로서 소장은 공석이 되었으나, 정관 개정은 하지 않고 일단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2004년 '진보적 온라인 공동체 형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함으로써, 참세상 방송국의 인력을 대폭 충원하였다. 참세상 방송국은 4.15 총선 대응을 함께 했던

another0415.net과 통합하고, 이름을 '미디어참세상'으로 변경하였다. 전반적인 조직 구조는 정책국, 미디어참세상, 기술국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2004년 2월 14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 초기부터 함께 하였고, 초대 대표를 역임하셨던 고 김진균 선생님께서 별세하셨다.

조시(弔詩)

(김진균 교수님 영전에)

백기완

참이 아니면 말을 얹으시고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질 얹으시고

한낮인데도 이렇게 캄캄한 밤을
딱딱 부딪듯처럼 지피시던
님이시여

마침내 봄은 오건만
그래도 오지 않는 세상의 봄을
온몸으로 띄우시더니
뭐이가 그리 바빠 먼저 가시나이까

지금 우리들의 눈엔
절망도 아니 보입니다
모두가 제 울타리만 넓히려고 팡팡
마치 가문 웅덩이의 피래미들처럼
서로 물어뜯고 서로 핏내는 이 막판에

가슴까지 활짝 열어
모두를 내놓으시더니
뭐이가 그리 바빠 먼저 가시나이까

지금 우리들의 네 귀퉁이는
몽땅 끊겨 있습니다

악랄한 자본 축적이
역사 진보로 둔갑하고
거짓 경쟁에서 이기면
영웅도 되고 스승도 되고
문화 예술은 가진자의 도락이요
학문은 이긴자의 쓸모로 강요되는

이 허무의 한복판에 떡하니 나서
학문할 바, 창조할 바, 세계진보의
실체를 디리대던 선생이시여

밤을 찢어발기는 싸움은
한 점 이슬로 남는다더니
그냥 그렇게 한 점 이슬로 가시는 겁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님을
땅에 묻질 못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이정표, 민중의
하제 희망으로 올려 세울지니
님이시여 정말 원통합니다

2005년 정기총회는 3월 2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종회 대표가 2년의 임기를 다시 시작하였으며, 강남훈 교수는 감사직책과 중복으로 맡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운영위원을 그만두었다. 2005년 운영위원회는 채만수, 김형준, 김명준, 이성우, 이용근, 장창원, 이은우, 남희섭 등 8명으로 운영되었다.

2005년 5월, 미디어참세상이 '민중언론 참세상'으로 조직적으로 독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은 정책국과 기술국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이외 사무국장, 재정담당, 회계담당을 두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이후 재정 및 회원 업무를 특정인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근 활동가들이 순환하여 맡고 있다. 이는 재정 및 회원 업무가 조직의 운영에는 필수적인 반면, 단순 노동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 및 회원 업무를 순환적으로 담당함으로써, 활동가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전체 운영과 관련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2006년 정기총회는 1월 24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특별한 정관개정 사항이나 임원 변동은 없었다. 그러나 사무국 체계에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의 국 체계나 사무국장 등의 공식 직함을 폐지하고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한 것이다. 미디어참세상이 독립함으로써,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가가 대폭 축소되었고, 그럼에도 국 체계가 유지됨으로써 활동가 사이의 분업화가 강화되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정책과 기술 영역의 활동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차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또한 국장과 국원이라는 위계구조를 폐지함으로써, 수평적인 내부 소통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대신 사무국 활동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코디네이터를 두었지만,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축소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활성화하려 노력하였다. 국 체계는 해소되었지만, 사업에 따라 복수의 팀을 두었다.

2007년 정기총회는 2월 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강남훈(한신대 사회과학부 교수), 신기섭(한겨레신문 기자), 김기중(변호사)이 새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김도형 변호사가 새 감사로 선출되었다. 월간 <네트워커>가 2006년으로 중간함에 따라, 2007년부터 '네트워커 편집위원회' 역시 해소되었다.

2008년 정기총회는 2월 2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종회 대표를 비롯하여, 오병일, 장여경, 황규만, 김하나(달군), 김승욱, 홍지은, 김지성 등 8명이 상근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과제와 전망

(2008년 10월 28일 오후 5시,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과제와 전망을 논의하는 좌담이 개최되었다. 이 좌담에는 이종희 대표, 김명준, 이성우 운영위원, 홍석만 민중언론 참세상 사무처장, 오병일, 김승욱 활동가가 참석하였다. 아래 내용은 이 날 좌담을 정리한 것이다.)

1998년 11월 14일 창립된 이후,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로 인한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이루어졌다.

텍스트 기반 BBS를 중심으로 했던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서비스는 2000년을 경과하면서 웹 기반 커뮤니티로 변화하였으며, 주된 소통 시스템도 게시판에서 블로그로, 단체에서 활동가 개인으로 변화하였다. 검색과 콘텐츠 중심의 사회운동 포털을 기획하기도 했으나, 주류 포털의 모델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비영리 단체로서의) 사업 모델과 양립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단순한 기술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운동 정보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운동 영향력 확대라는 '미디어'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진보 포털의 구축 시도 역시 그 일환이었으며, 대안 미디어 생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참세상 방송국과 참세상 뉴스, 미디어 참세상을 거쳐, 2005년 '민중언론 참세상'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제 민중언론 참세상은 독립하였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여전히 웹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보 위키에 대한 실험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로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2000년 정책실 신설은 정보운동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위축된 정보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지문날인 반대연대,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정보공유연대 IPLeft,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 등 정보운동 이슈별 연대체를 구성하고, 활동을 코디네이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3년 NEIS 반대투쟁을 계기로 '정보인권' 담론이 사회 일반에 대중화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등과 같이 활동이 침체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정보인권 의제는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발전에 대한 대중적 환상, 그리고 산업화와 효율성의 담론은 여전히 강고하다. 기술 발전에 어떠한 입장을 가질 것인지, 대중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는 여전히 안고 있는 고민이다.

'정보인권' 담론의 한계 역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권운동도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운동 역시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심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자유주의적 의제-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에 집중하였으며, 정보통신 산업의 구조와 같은 전체적인 조망,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진흥 정책 등에 있어서는 활동의 공백이 존재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06년부터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미디어 공공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개입을 시작한 것은 이러한 고민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2008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는 기존 운동 단체에게 많은 영감과 동시에 반성을 안겨주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게도 스스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고민을 던져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음(Daum) 아고라 등이 이명박 정부의 압력에 의해 게시글을 삭제하고, 아고라 시스템을 변경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네티즌들은 아고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일부는 한겨레 신문 사이트의 한토마로 이동하기도 하고, 새로운 대안 사이트의 구축을 고민하기도 하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보네트워크와 같은 독립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중적으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에게 진보네트워크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또한, 97년 총파업통신지원단 활동은 무척 활발했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오히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출범한 지 10년이 된 지금, 그 울림은 훨씬 덜한 것이 아닌가하는 평가도 제기된다. PC 통신 시절에는 일반 동호회들도 리본을 다는 등 사회 이슈에 동참을 했는데, 지금 진보네트워크는 운동 단체와 활동가들의 고립된 공간이 되고 있지 않은가하는 반성인 것이다. 2008년 촛불 공간에서도 진보네트워크는 자신을 드러내고, 일반 대중들과 독립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려고 노력했는가.

물론 진보네트워크가 보다 많은 대중을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진보 포털에 대한 실험에서 있었던 고민과 같이, 비영리 단체로서 대중적 포털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있는가? 혹은 오마이뉴스나 한겨레 신문과 같은 기업적 형태로 가야하는가? 그럴 경우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는 정보인권 운동 영역에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인권 운동이 일반 공동체나 대중과의 연결이 약해지고, 단체 활동가와 전문가의 전문적 활동으로 축소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내부적 비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비록 NEIS를 계기로 정보인권 담론이 대중화되었다고 하나, 촛불시위에 대한 탄압 국면에서도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비판적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대중적 영향력은 한계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진보네트워크라는 독립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면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과 같은) 주류 네트워크 내부와의 소통은 단절이 되어왔다. 과연 독립 네트워크 운동과 주류 네트워크 내에서의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운동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의 지역 정보운동 단체들은 서서히 위축되어 사라졌거나 지역 인터넷 언론으로 전환되었다. 정보통신운동은 서울에만 있으면 되는가, 지역의 정보통신운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지역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과 운동모델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지난 10년 동안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은 독립 네트워크 운영, 정보통신정책(정보인권) 운동, 미디어 운동 등 3개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구분되어 왔다. 기술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활동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또 변화해왔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 활동의 관성으로, 혹은 눈에 보이는 이슈 파이팅 중심으로

활동이 배치되어 왔다. 그리고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중장기적 목표와 계획이 부재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 현재의 상황을 다시 규정하고,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프레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서 조직 체계, 재정 구조, 운영 및 활동 방식 등에 대해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향후 10년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을 2009년 초에 개최될 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대표 : 이종희

□ 운영위원

채만수(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김형준(참세상 전 운영자), 강남훈(한신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명준(영상미디어센터 소장), 이성우(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 이용근(노동네트워크), 장창원(노동네트워크), 이은우(변호사), 남희섭(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김기중(변호사), 신기섭(한겨레신문 기자)

□ 감사

김도형(변호사)

□ 활동가

오병일, 장여경, 황규만, 김하나(달군), 김승욱, 홍지은, 김지성

진보네트워크센터 정관

1998. 11. 14. 제정
2000. 3. . 개정
2001. 3. 3. 개정
2002. 2. 21. 개정
2003. 3. 28. 개정
2004. 2. 1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이름은 진보네트워크센터(Korean Progressive Network'Jinbonet')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운영한다. 그리고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연대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표현의 자유와 의사소통의 권리 등 정보화사회의 기본권을 확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단체는 위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운영
2. 각 사회운동 영역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부문 및 지역의 네트워크 건설
3. 사회운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4.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운영
5. 올바른 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마련 및 실천
6.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7. 진보적인 국제네트워크와의 연대
8. 기타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은 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운영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회원으로 가입되며, 본인이 탈퇴원을 제출하였을 때는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 (회원의 구분 및 권리와 의무)

1. 본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된다.
2. 정회원은 본 단체의 제반 사업에 참여하고, 총회의 출석·발언권 및 의결권과 회무담임권을 가진다.
3. 후원회원은 본 단체에서 발간하는 소정의 자료를 제공받고, 본 단체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4. 회원은 본 단체의 정관 및 규칙과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8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단체의 정관이나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불복하는 회원은 총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9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총회의 구성과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대표가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대표는 소집요청이 있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대표는 총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소집일 5일 전까지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총회의 의장은 대표가 맡는다. 단, 대표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총회를 주재할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사업계획과 결산의 승인 및 예산의 최종 확정
3. 정관의 개정
4. 본 단체의 해산과 통합
5. 운영위원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기타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정관의 개정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본단체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정회원은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임원과 기구

제12조 (임원의 구성)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2. 운영위원 5인 이상 20인 이내
3. 감사

제13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는 본 단체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본 단체의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

의·의결한다.

3. 감사는 본 단체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궐위로 총회에서 새로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 (기구)

1. 본 단체의 기구로는 총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본 단체는 특정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설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기관의 설립·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1. 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심의·의결기구로 총회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하며, 원칙상 1달에 1회 소집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과 결산의 심의 및 예산의 편성
2. 소장의 임면
3. 부설기관의 설립·폐지의 승인
4. 회원의 징계
5.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6. 기타 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

제18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운영위원은 의결권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장 실무집행국

제19조 (소장)

1. 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임면한다.
2. 소장은 사무국 등 실무집행국들을 관장하며, 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예산의 집행 책임을 진다.

제20조 (실무집행국)

1. 본 단체의 사무실 운영 등 실무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 등 실무집행국을 둔다.
2. 실무집행국의 책임자는 소장이 임면한다.
3. 실무집행국의 책임자는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 사항에 관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 (회계연도)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단 본 단체 창립연도의 회계는 그 다음 해 회계연도에 포함시킨다.

제22조 (재정)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 (예산) 연도별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총회는 예산안 수정을 결의할 수 있다.

제24조 (결산) 연도별 결산내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회계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5조 (세칙) 본 정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의 관례를 따르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 세칙에 의한다.

1998년

- 1998년 2월 : 독립 진보 BBS '참세상'이 모든 장비와 회선을 기증하는 형태로 진보네트워크센터 건설을 제안
- 1998년 4월 :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정보연대 SING, 참세상, 통신연대 등이 진보네트워크센터 건설을 위한 협의모임 진행
- 1998년 5월 6일 : 제 1차 준비모임
 - 민주노총, 민교협, 학단협, 민예총, 지식인연대, 통신연대, 참세상, 정보연대 SING 등
 - 명칭을 (가칭)진보네트워크센터로 하고
 - 임시대표로 김진균(서울대 교수,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대표) 선출
- 1998년 5월 16일 : 제 2차 준비모임
 - 제안서 검토
 - 추진위원 교섭 논의
- 1998년 5월 26일 : 제 3차 준비모임
 -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에 대한 각 단체 설명회 현황
 - 지역 단체 순회에 대한 보고
 - 노동네트워크 건설 현황에 대한 보고
 - 추진위원 교섭 현황
 - 추진위원회 발족식 준비 검토
 - 월례 토론회 기획안 검토
 -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계획 검토
 - 한겨레 및 CBS에 후원 요청.
- 1998년 6월 2일 : 제 4차 준비모임
 - 브로셔 검토
 - 추진위원회 발족식 기획안 검토
 - 메일링리스트 개통(net@mail.sing-kr.org)
- 1998년 6월 16일 : 제 5차 준비모임
 - 추진위원회 조직체계 논의
 - 집행위원 선임에 대해 논의
 - 해외단체 축전 섭외

- 일정별 사업계획 검토
- 사업 및 서비스 기획안 검토
- 1998년 5~6월 : 각 사회단체 설명회 진행
 - 민교협, 보건의료대표자회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방송개혁국민회의, 여연, 인권운동사랑방, 녹색연합,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정토회, 참여연대, 환경련, 건치중앙위원회, 학단협, 지역(광주BIT-SIG, 전주INP, 진주, 부산정보연대 PIN), 시민의신문,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네트워크, 민언협, 한국정보통신센터, 새문명아카데미, 매비우스 등
- 1998년 7월 1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원회 발족
 - 발족식 기념 토론회 "진보진영의 미디어전략과 진보네트워크센터" 개최
 - 대표 선출 (김진균)
 - 집행위원 선출 (강내희, 강동진, 구중서, 김도형, 김명준, 김제남, 김형준, 노진귀, 박석운, 백찬홍, 서준식, 유덕상, 이용근, 이종희, 이철순, 장도리, 정원오, 진관)
 - 1만 발기인 운동 시작
 - 당시 추진위원 131명
 - 당시 발기인 366명
- 1998년 7월 10일 : 노동네트워크 추진협의회 발족
- 1998년 7월 15일 : 아래아 한글 '사회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한겨레신문사, 서울기독교청년회,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주최
- 1998년 7월 15일 ~ 11월 9일 : 11차에 걸친 집행위원회 회의
- 1998년 7월 22일 : 정책토론회 제2회 "지역네트워크 운동의 과제와 현황"
- 1998년 8월 1일 : 학생네트워크 추진협의회(준) 발족
- 1998년 8월 20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시범서비스 시작
- 1998년 9월 12일 : "IMF에 도전하는 민중" 서울 국제민중대회 총결산 및 실업자대행진 인터넷 중계 방송
- 1998년 9월 15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네트워크의 '명칭' 및 '카피' 공모
- 1998년 9월 26일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홈페이지 제공
 - <http://freedom.jinbo.net/hurights>
- 1998년 9월 17일 : 학생네트워크 추진협의회 발족
- 1998년 10월 31일 : 토론회 '학생운동의 현황과 과제, 미디어전략' 개최
- 1998년 11월 8일 : '98 민중대회 인터넷 중계 방송 ['98 민중대회]
- 1998년 11월 9일~15일 : '대안미디어와 현장네트워크의 길찾기'- '98 노동미디어 주간 주최

- 1998년 11월 27일 :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홈페이지 개설
 - <http://freedom.jinbo.net>
- 1998년 11월 14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발족식 및 창립총회
 - 추진위원 32명 참석 및 위임 20명, 발기인 37명 참석 및 위임 96명
 - 인사말(김진균/추진위원장) 및 축사 (장성룡/기사협, 유초하/민교협, 홍근수/향린교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노동네트워크 소개 프리젠테이션
 - 경과 및 사업보고
 - 결산보고
 - 정관 제정
 - 본단체의 정식명칭 결정 : 진보네트워크센터(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 본단체가 운영하는 서비스명 결정 :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 <http://www.jinbo.net>)
 - 대표 김진균 선출
 - 이사 선출 (강정구, 김형준, 서준식, 오세철, 유초하, 윤종현, 이갑용, 장창원, 홍근수)
 - 감사 선출 (업무감사 조광희 변호사, 회계감사 강영근 회계사)
 - 사업계획안 심의
 - 사무국 소개
- 1998년 11월 15일 : 생존권사수와 총체적 개혁촉구 위한 노동자/농민/빈민대회 인터넷 중계 방송
- 1998년 11월 15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식서비스 개시
 - PC통신 참세상 (<telnet://jinbo.net>)
 - 인터넷 서비스 (<http://www.jinbo.net>)
- 1998년 12월 10일 : 제1차 이사회 개최
 - 운영위원 선임 (강내희, 강동진, 김도형, 김명준, 박석운, 백찬홍, 이용근, 이종희, 이철순, 장도리, 정원오, 최경송, 최인기)
- 1998년 12월 10일 UN인권선언50주년 기념 사이버권리 홈페이지 개설
 -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공동
 - <http://freespeech.jinbo.net>

1999년

- 1999년 1월 8일 : [성명] 정보통신부는 014XY전화요금 인상 및 접속료부과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1999년 1월 20, 21일 : 제1회 사회단체 실무자 정보통신 교육
- 1999년 2월 1일 : 소식지 창간호 발행
- 1999년 2월 6일 :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 공동 주최
- 1999년 2월 18일 : 민주노총 CUG 개설 (5월 18일 나우누리 폐쇄)
- 1999년 2월 18, 19일 : 제2회 사회단체 실무자 정보통신 교육
- 1999년 2월 26일 : [성명] 인텔 펜티엄III 시판을 즉각 철회하라!
- 1999년 3월 9일 : 제2차 이사회 개최
 - 진보네트워크센터 법인화안 검토, 1999년 사업계획안 심의, 1999년 예산안 의결
- 1999년 3월 12일 : 1999년 정기총회
 - 진보네트워크 법인화안 의결
 - 1999년 사업계획안 의결
 - 1999년 예산안 의결
- 1999년 3월 : 마이크로소프트사 독점가격 항의메일 보내기 운동
 - <http://www.jinbo.net/ms.html>
- 1999년 3월 18,19일 : 제3회 사회단체 실무자 정보통신 교육
- 1999년 4월 19일~26일 : 고용안정 통신단 운영
 - <http://www.jinbo.net/~cast/strike99/index.html>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와 공동사업
- 1999년 6월 14일 : [주민등록제도 개선과 지문날인 거부 국민행동] 참가, 홈페이지 개설
 - <http://fprint.jinbo.net>
- 1999년 6월 17일 : [신자유주의반대 행동네트워크] 홈페이지 개설
 - <http://www.jinbo.net/~aseedkr>
- 1999년 7월 : [한국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전국 대학인·사회인 인문사회과학도서 비평대회] 후원
 - 1999년 7월 1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노동네트워크운영협의회, 노동정보화사업단 사무실 이전
 - 1999년 7월 19일~23일 인터독-아시아링크 워크샵 참석

- INTERDOC-ASIALINK WORKSHOP

- ANYER, JULY 19-23, 1999

- 1999년 8월~12월 : [정보화로 시민운동 날개달기 캠페인] 후원
- 1999년 8월 : 세계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비영리 연합체인 진보통신연합 APC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에 협력 네트워크 (partner network)로 참가
- 1999년 8월 :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
- 1999년 8월 : 사회운동정보 포털사이트 개통
 - <http://www.jinbo.net>
- 1999년 9월 : 인터넷 방송 [참세상방송국] 시험방송 시작
- 1999년 9월 17일 : [성명] 통신공간에 대한 불법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하라
 - 1999년 10월 29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교육장 개관
 - 11월 1일부터 정규 강좌 진행
 - 1999년 11월 15일~20일 :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노동운동과 뉴미디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노동자 네트워크전략] 후원
 - <http://lmedia.nodong.net>
 - 1999년 11월 30일 : [신자유주의반대 행동네트워크] 시애틀 WTO 협상 특집 홈페이지 운영
 - <http://antiwto.jinbo.net>

2000년

- 2000년 1월 : KRNIC NC위원회에 참가
- 2000년 1월 23일 : [노동문화박람회] 후원
 - 주최 :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준비위원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 후원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국노동문화운동단체대표자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 2000년 2월 : [열린네트워크] 사업 시행
 - 다른 통신망에 참세상BBS 공개 (천리안·하이텔·노조넷·나우누리·유니텔 go jinbonet)
 - 웹-BBS 연동과 공개 (1차: 일부 게시판을 웹으로 공개)
- 2000년 2월 22일 : [4.13총선과 민중운동의 진로 토론회] 후원
- 2000년 3월 4일 : 삼성전자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 제기
- 2000년 3월 6일 : 제3차 이사회 개최
 - 정관 개정(안) 토의, 2000년 사업계획(안) 심의, 지난 회기 결산(안) 심의, 2000년 예산(안) 의결
- 2000년 3월 14 ~ 24일 : 온라인 총회 개최
 - 1999년 사업보고 및 2000년 사업계획, 정관개정, 임원선출 승인
- 2000년 3월 29일 ~ 4월 13일 : 온라인 토론회 '선거시기 통신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개최
- 2000년 3월 18일, 4월 1일 : 토론회 [IPLeft 토론회 '정보·생명권과 지적재산권'] 공동주최
- 2000년 4월 3일 : 진보운동웹진 [네트워크] 개통
 - <http://networker.jinbo.net>
- 2000년 4월 11일 : [성명]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한다
 - 2000년 4월 : 포항제철 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입장 발표 및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조직 (10개국 9개 미러 사이트 운영)
 - 2000년 4월 11일 : [성명] 포항제철 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입장
 - 2000년 4월 28일 : 토론회 [인터넷 공동체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공동주최

- 2000년 5월 11일 : 긴급토론회 "한국사회 벤처열풍,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 2000년 5월 25일 : [성명] 정보통신윤리위 '백두청년회' 삭제요구에 대하여
- 2000년 6월 12일 : 리차드 스톨만 초청 강연회 개최
- 2000년 6월 15일 : 카피레프트 캠페인 시작
 - 자유문서라이선스 캠페인·홈페이지 카피레프트 캠페인
- 2000년 7월 8일 : 한스 클라인 초청 간담회 '정보 정책에서의 공공성 : CPSR의 활동' 개최
 - 2000년 7월 13~16일 : ICANN 요코하마 미팅 참석
 - ICANN Public Meeting : Yokohama, Japan, July 13-16, 2000
 - Civil Society Forum (CPSR 주관) : Yokohama, Japan, July 13, 2000
 - 2000년 7월 18일 : APC, JCA-Net 주최 [반도청 공개 세미나] 참석, 발표
 - 2000년 7월 20일 : [성명] '정통부는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통신방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2000년 8월~12월 : 시민단체 정보화 무료교육 [우리단체 홈페이지 우리 손으로] 주관
 - 2000년 8월 16일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2000년 8월 19일 : [평행선] 서울상영회 공동주최
 - 2000년 8월 26일 : [성명]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강행과 MBC의 소위 '해킹' 보도에 엄중 경고한다
 - 2000년 8월 27일 : 정정보도 요청 '연합뉴스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 2000년 8월 28일 : [논평]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 : 절반의 승리
 - 2000년 8월 30일 : [성명] 사회단체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 중단하라!
 - 2000년 9월 :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안티조선연대)] 참가
 - 2000년 9월 2일 : [검열반대]를 위한 네티즌 대회 (신촌)
 - 2000년 9월 5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시민공청회 공동주최 (39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 2000년 9월 11일 : [토론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시민공청회
 - 2000년 9월 16일 : [검열반대]를 위한 네티즌 대회 (대학로)
 - * 온라인 시위 주1회(매주 화요일 10시)
 - 2000년 9월 20일 : [논평]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의 입장

- 2000년 9월 23일 :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 집중행동의 날 개최
- 2000년 10월 : 참세상공동체 오픈(WEB-BBS참세상 연동)
 - <http://bbs.jinbo.net>.
 - 열린네트워크 대토론 시작(go opencham)
- 2000년 10월 :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
 - 2000년 10월 15일 : [성명] 정보통신부는 악의적인 비방과 모략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시한 인터넷 통제와 검열기도를 중지하라!
 - 2000년 10월 18일 : 토론회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국제토론회] 주최, 주관
 - 2000년 10월 19일 : [성명] 국회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라
 - 2000년 10월 19일 : 온라인 공간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자료집 발간
 - 2000년 10월 20일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발족과 참가
 - 준비위원회 : 대자보,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성남청년정보센터,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물과사상 독자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 2000년 10월 25일 : [성명] 인터넷방송국 '청춘' 탄압에 대한 인터넷방송운동단체들의 입장
 - 2000년 11월 9일 : [성명] 청소년보호법으로 옮겨진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대한다
 - 2000년 11월 11일 : [성명] 연합뉴스와 이정내 기자는 폭언에 대해 사과하라!
 - 2000년 11월~2001년 2월 : 여성에게 안전하고 여성 친화적인 여성 사이트 '여성들의 인터넷 여성마당' 주관
 - 2000년 11월 14일 : PC통신 참세상 무료화 선언
 - 2000년 11월 27일~12월 3일 : 노동미디어 2000 주간 : "다시 살펴보는 인터넷과 노동운동" 공동주최
 - 2000년 11월 29일 : < 사회운동단체, 홈페이지 운영원칙 어때야 하는가? > 워크샵
 - 2000년 12월 5일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0년 12월 5일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0년 12월 14일 : EFF 존페리발로우 초청 간담회
- 2000년 12월 15일 : [성명] 절반의 승리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보와 인터넷의 자유
- 2000년 12월 29일 : 2000년 정보운동 3대 뉴스 선정

2001년

- 2001년 1월 15일 : [성명]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에 동참하며
- 2001년 1월 17일~22일 : 필리핀 마닐라 APC WNSP 회의 참석
- 2001년 1월 : [정보통신노동자 고용안정쟁취와 노동조합사수를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참가
 - 멀티미디어시스템 노동조합, 디지털밸리 노동조합, 서울지역사무전문서비스직 노동조합 글로넷 지부, 근영통신 노동조합, 정보통신노동자 네트워크,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부, 사회진보연대, 노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홍익대 학생연대회의
- 2001년 2월 3일~4일 : [제1회 PC통신 영화동호회 연합영화제 - 地殼變動 (지각변동, diastrophism, crustal movements)] 후원
- 2001년 2월 6일 : 토론회와 백서 발간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 2001년 2월 10일 :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1년 2월 10일~11일 : 제1회 전국정보운동포럼 개최
- 2001년 2월 12일 : 전국연합 웹호스팅 사찰 사건에 대한 [성명] 전자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온라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2001년 2월 12일 : [성명]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에 반대한다!
- 2001년 2월 21일 : '대우자동차 투쟁 통신단' 구성, 경찰의 폭력진압 영상 고발
 -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대자 공투본, 대자 노동조합, 노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영상중계단 공동
- 2001년 2월 21일 : [성명] 홈페이지의 비판적 글을 명분으로 한 성남시민모임 압수수색에 강력 항의한다!
- 2001년 2월 28일 : [성명]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에 반대한다!
- 2001년 2월 26일~3월 3일 : 2001년 정기 총회
 - 2월 26일~3월 2일 온라인 총회 (참세상 go jinbo)
 - 3월 3일 오프라인 총회 (3시~6시, 한국여성민우회 강당)
 - 총회 사전행사 : 토론회 [진보네트워크센터와 2001년 정보운동]
- 2001년 3월 12일 : 공개질의 [일선학교 인터넷 전용선 무료지원의 문제]
 - 교육인적자원부·각 시도교육청·정보통신부·한국통신에 대하여

- 2001년 3월 22일 : [성명] 정부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2001년 3월 23일 : [성명]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인터넷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 2001년 3월 27일 : [성명] KBS노동조합 강철구 부위원장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한다!
- 2001년 3월 29일 : [성명] 교사·학생의 개인정보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 2001년 4월 6일~20일 온라인 토론회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 해결적인가, 정보공유인가?]
- 2001년 4월 20일~21일 : 네티즌 토론회와 네티즌 한마당 [억압박살! 자유폭발!]
- 2001년 4월 26일 : [성명]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실행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2001년 5월 4일 [토론회] 학교정보화와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 2001년 5월 7일 : [성명] 강철구는 KBS노조 성폭력 사건 공대위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2001년 5월 8일 : [성명] 정부는 언제쯤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인가
- 2001년 5월 14일 : [성명] 용산구청 홈페이지에는 '삭제'와 '추적'만 있는가?
- 2001년 5월 23일 : 토론회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 원칙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01년 5월 24일 : 토론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 2001년 5월 24일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제출
- 2001년 5월 28일 : [성명] 작가이자 중학교 교사이자 이 사회의 시민인 김인규 씨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 2001년 5월 29일 : [성명] 정부는 전자건강보험증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 2001년 6월 1일 : [성명] 막나가는 경찰의 사이버 수사, 도를 넘었다 - 가진자를 감싸기 위해 사회단체 서버를 뒤지고 사이버공간을 헤집는 정권
- 2001년 6월 5일 : [입장] 이한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보네트워킹의 입장
- 2001년 6월 12일 : [성명]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2001년 6월 13일 : [성명] 정보통신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폐쇄조치를 철

회하고,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2001년 6월 13일 : [성명] 김인규 교사에 대한 인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공개 사과하고 폐쇄된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라 !!
- 2001년 6월 16일 : 정보통신위원회에 의해 폐쇄된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에 대한 미러링 사이트 (mirroring site, 복제 사이트) 구축, 아이노스쿨 홈페이지 호스팅
- 2001년 6월 12일-7월 2일 : 김대중 정권 규탄 홈페이지 첫화면 달기
- 2001년 6월 20일~28일 :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 반대', '온라인 시위 보장' 1인시위] 정보통신부 앞에서 진행
- 2001년 6월 26일 :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 2001년 6월 30일~7월 2일 :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와 온라인시위 보장 72시간 사이트 파업]
- 2001년 7월 2일 : [성명] 사이트 파업을 마치며 - 인터넷의 자유는 계속 지켜야 하며 정보통신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 2001년 7월 23일 : [성명]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한 가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 안티·패러디 사이트에 대한 족쇄 풀리다
- 2001년 7월 26일 : [성명] 정보통신위원회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 정부는 인터넷을 검열하는 위헌적 기구 정보통신위원회와 관련 법을 즉각 폐지하라!
- 2001년 8월 2일 : [성명] 정보통신위원회는 진보네트워킹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킹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2001년 8월 4일 : 정보통신위원회 앞 항의집회 : 진보네트워킹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정보통신위원회 삭제 요구와 진보네트워킹센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 2001년 8월 14일 : [성명]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 2001년 8월 14일 : [성명] 영풍그룹은 진보네트워킹센터 기자 집단폭행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 2001년 8월 17일 : 제1회 <정보통신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 2001년 8월 17일 : 제1회 <제1회 진보네트워킹센터 정책 월례포럼> :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보운동
- 2001년 8월 21일 : [성명] 뻔뻔한 성폭력 가해자 이정내 기자와 오만한 언

론권력 연합뉴스를 규탄한다! - 연합뉴스에 대한 취재 거부를 결의하며

- 2001년 8월 22일 : [토론회]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주민등록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2001년 08월 24일 : [성명] 브라질의 에이즈 약물 강제실시 결정에 박수와 지지를 보내며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은 민중의 건강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 2001년 8월 31일 제2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 2001년 9월 3일 : [성명] (주)대용은 노동자 감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CCTV를 철거하라!
- 2001년 9월 4일 : 지문날인 반대연대 결성
- 2001년 9월 11일 : 정보통신정책 관련 2001년 현안 자료집 발간
- 2001년 9월 11일 : [성명] 매일 37,000명이 특허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 2001년 9월 14일 : 제3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 2001년 9월 15일 : 정보운동 월례포럼 <현실 정보사회와 인권>
- 2001년 9월 15일 ~ 10월 19일 : 정보운동강좌 '정보화와 인권' 개최
- 2001년 9월 17일 : [성명] 충남교육청은 김인규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2001년 9월 18일~ 19일 : TRIPs 이사회에서의 의약품 특허에 관련된 논의와 우리의 입장에 대하여 한국 담당자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 "지적 재산의 권리는 건강과 생존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 각국은 자국의 의약품 특허를 결정하고 집행할 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 2001년 9월 20일 : 전쟁반대! 테러반대! 반전평화 캠페인 페이지 오픈
- <http://antiwar.jinbo.net>
- 2001년 9월 28일 : 제4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음란한 권력의 실체를 벗겨주마!!" - 음 / 란 / 페 / 스 / 티 / 발 -
- 2001년 10월 8일 : [성명] 인권이란 말을 부끄럽게 만든 영화제 - 울산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속한 모든 단체들은 <밥꽃양> 사전검열과 홈페이지 폐쇄에 대하여 해명하고 사과하라
- 2001년 10월 10일 : 공개토론회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 2001년 10월 12일 ~ 14일 : 제5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 2001년 10월 15일 : [성명]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발표로 인터넷내용등

급제 확정되다

- 2001년 10월 18일 인터넷내용등급제 확정 - 정보통신부 장관고시 반대 집회
- 2001년 10월 22일 ~ 12월 20일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각계 인사,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요구 2001년 10월 22일부터 60일간 명동성당에서 1인 릴레이 철야단식 농성
- 2001년 10월 26일 : [성명]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성남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성남시의회는 '인터넷 조례안' 제정을 위한 성남시의 들러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2001년 10월 28일 : [입장] 붕어빵 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부터 계좌번호 등 다양해 ..., 지문날인 반대연대, 당국의 확실한 대책 촉구하고 나서
- 2001년 10월 28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의 밤 일일 호프
- 2001년 11월 1일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소속 사회단체들, 인터넷등급제 시행일인 11월 1일에 인터넷등급제 반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위한 결사항전 결의대회 집회
- 2001년 11월 1일 : [성명]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독점에 기반한 인터넷 장악 시도에 반대한다. - 윈도 XP의 출시에 즈음하여 -
- 2001년 11월 1일 : 결사항전 결의문, 인터넷등급을 거부하고 차단소프트웨어를 거부하자!
- 2001년 11월 3일 정보통신부장관 퇴진과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집회
-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예술인 명동프로젝트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 2001년 11월 5일 : 십지지문원지 반환 또는 폐기 청구의 청구인 모집, 당신이 17살 때 찍은 지문원지를 경찰에게서 돌려받으시다!
- 2001년 11월 8일 ~ 10일 : 아시아 인터넷 권리 국제 회의(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 개최, <http://asia-ir.jinbo.net>
- 2001년 11월 11일 : 한국을 방문한 아시아 12개국 활동가들, 아시아 인터넷권리에 대한 선언 발표와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추구는 인터넷에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 2001년 11월 11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국내 최초 APC 회원네트워크로 가입
- 2001년 11월 12일 : [성명] 정치인 비판 원천차단과 사이버검열을 자행하는 검찰은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대성씨를 즉각 석방하라!!!
- 2001년 11월 12일 ~ 25일 :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2001 국제 행사 개최

- "미디어 혁명과 노동운동" :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운동의 미디어전략과 국제연대

- 2001년 11월 21일 : 지문날인 반대자들, 경찰이 보관중인 십이지문 원지에 대하여 경찰과 행정자치부에 반환 또는 폐기 청구 기자회견
- 2001년 11월 27일 참세상공동체 홈페이지 주소 변경
-bbs.jinbo.net 에서 go.jinbo.net 로
- 2001년 11월 27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정보통신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 2001년 11월 27일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66호)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지식의 생산방식에는 영리적 목적의 상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 2001년 11월 30일 : [성명]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정보통신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을 지지한다
- 2001년 12월 3일 : [성명] 인터넷에 족쇄를 채우는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 2001년 12월 5일 : 노바티스의 글리벡 공급 중단 규탄 공동입장 발표
- 2001년 12월 5일 : 윈도우XP 문제점과 OS독점반대 토론회
- 2001년 12월 10일 : [논평] 단식농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와 연대, 인터넷 정책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져야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정보통신부 앞 단식농성을 마치며
- 2001년 12월 11일 제2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운동 월례포럼
- 제목 : 벤담의 파놉티콘에서 전자 시놉티콘까지 : 감시와 역감시, 그 열림과 닫힘의 변증법 / 발제 : 홍성욱 (토론토대학 과학기술사학과 교수)
- 2001년 12월 18일 : [성명] 정부는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조치를 중단하라! - 민간보험회사와 공단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반대성명
- 2001년 12월 20일 : [성명] 우리는 인터넷 국가 검열을 끝장내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 60일 릴레이 철야 단식 농성을 마치며

2002년

- 2002년 1월 4일 : 지문날인 반대 워크샵
- 2002년 1월 15일 : [성명] 대용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했다 - '감시카메라 사용자 권리' 노동부 해석 철회해야
- 2002년 1월 21일 - 2월 15일 : 교육센터 1차 정기 교육
- 2002년 1월 24일 : 집행위원회 1차 회의
- 2002년 1월 25일 : 월례포럼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라>
- 2002년 2월 4일 : [성명]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를 지지한다!
- 2002년 2월 7일 : 이마리오씨 자기정보 열람권 요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경찰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 2002년 2월 14일 : 2001년 11월의 십이지문 반환 및 폐기 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 2002년 2월 20일 : [성명]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 2002년 2월 21일 : 2002년 총회 개최
- 2002년 3월 1일 - 3일 : 제2회 전국정보운동포럼 개최
- 2002년 3월 4일 :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청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유권 해석과 삭제 요청 재고 요청
- 2002년 3월 6일 : 경찰의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 기도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회단체들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 2002년 3월 13일 :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발족
- 2002년 3월 18일 - 4월 4일 : 교육센터 3월 정기교육
- 2002년 3월 20일 : [성명] 경찰은 발전노조원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몰지각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2002년 3월 27일 :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성명] 수사기관은 위헌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중단하라!
- 2002년 3월 27일 : 3월 월례포럼, 세미나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부) 제1강: 정보혁명 의의와 노동가치론
- 2002년 4월 3일 : 세미나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부) 제2강: 상품화경향과 비생산적 노동

- 2002년 4월 9일 : 지문과 얼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규탄 [성명] 정보통신부는 지문과 얼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 -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는 있는가?
- 2002년 4월 10일 : 4월 월례포럼, 세미나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부) 제3강: 배제적 축적체제
- 2002년 4월 17일 : 세미나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부) 제4강: 신경제, 지식기반경제와 세계화된 경제
- 2002년 4월 22일 : 등급거부 선언과 기자회견
- 2002년 4월 22일 - 5월 21일 : 교육센터 4월 정기 교육
- 2002년 4월 25일 : [성명] 공공성 축소 반대! 정보의 나눔과 공유에 기반한 정보화!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
- 2002년 4월 25일 : 집행위원회 2차 회의
- 2002년 5월 6일 : 열린채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방영불가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 차라리 닫힌채널이라 불러라 - KBS 열린채널은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한 검열을 중지하고 즉각 방영하라!
- 2002년 5월 13일 : [성명] 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과정을 명하게 공개하라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차 요구하며
- 2002년 5월 15일 : [성명]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 대한 사전심의 등급분류 시행계획을 철회하라 (의견서 제출 2002년 6월 11일)
- 2002년 5월 24일 : 월례포럼 <스팸 메일 어떻게 규제할 하는가>
- 2002년 5월 28일 : [성명] 발전회사들은 홈페이지 차단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인터넷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2002년 5월 28일 : 2002 선거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보장과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과 관련하여 결의문 발표, 기자회견
- 2002년 5월 31일 : [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군대반대운동 (<http://www.non-serviam.org>)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 2002년 6월 8일
- 2002년 6월 8일 : 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 2002년 6월 10일 - 13일 :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확보 집중행동 주간 실시
- 2002년 6월 18일 : [성명] 인터넷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 2002년 6월 20일 : 사무국 활동가 내규 및 성폭력 내규 제정
- 2002년 6월 20일 : 집행위원회 3차 회의

- 2002년 6월 27일 :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판결과 관련한 [성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2002년 6월 27일 : 사무국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2002년 6월 28일 : 월례포럼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과 주민등록증>
- 2002년 7월 3일 : 토론회 <정보기본권이란 무엇인가>
- 2002년 7월 12일 : [성명]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붙여
- 2002년 7월 18일 : 토론회 <글리백 강제실시와 의약품 공공성 쟁취를 위한 민중대토론회>와 문화 공연 및 거리선전전
- 2002년 7월 22일 : 월례포럼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 2002년 7월 23일 : 6.13 지방선거에서의 참정권제한에 대한 헌법소원과 기자회견
- 2002년 7월 23일 - 12월 17일 : 6.13 지방선거에서의 참정권제한에 대한 행정자치부 앞 화요 1인시위
- 2002년 8월 1일 : CCTV 노동감시 사례 증가에 따른 <노동자감시 규탄 및 근절을 위한 노동·사회단체> 기자회견
- 2002년 8월 1일 : 소리바다 이슈 관련 MBC 100분 토론 출연
- 2002년 8월 2일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 2002년 8월 8일 : [성명]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개정, 명분없는 제값그릇챙기기이고 또 다른 헌법 위배이다 (8월 16일 의견서 제출, 8월 26일 공청회 패널 참석)
- 2002년 8월 13일 : [논평] 국가보안법에 유죄를 명하라! - 전지윤(성공회대 학생, 민주노동당 당원) 선고 공판에 부쳐
- 2002년 8월 14일 : [논평] 동성애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가 - 유감스런 엑스존의 패소
- 2002년 8월 14일 : 열린채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방영불가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제기
- 2002년 8월 27일 : 토론회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한, 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2002년 8월 28일 : 토론회 <디지털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
- 2002년 9월 3일 : 미디어 파일 포맷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발표
- 2002년 9월 5일 : 집행위원회 4차 회의
- 2002년 9월 6일 : [성명] 인터넷 토론이 이적행위? 김강필씨를 석방하고 국

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 첫 공판에 부처

- 2002년 9월 15일 - 19일 : GEM 회의 참가 : 여성 정보화에 수준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APC WNSP의 프로젝트
- 2002년 9월 16일 : 국회 정책 자료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 발간
- 2002년 9월 25일 : 토론회 <WSIS(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개입 방안>
- 2002년 9월 26일 : [성명] 인터넷 자유까지 짓밟는 국가보안법 - 김강필씨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2002년 9월 26일 : 열린채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방영불가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 2002년 9월 28일 - 12월 14일 : 6.13 지방선거에서의 참정권제한에 대한 격주 대학로 선전과 전국민 서명운동 전개
- 2002년 10월 1일 : [성명]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
- 2002년 10월 1일 : 월레포럼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
- 2002년 10월 7일 :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대 의견서 조직과 발표
- 2002년 10월 7일 - 12일 : Global Community Network 회의 참가, 캐나다 몬트리올
- 2002년 10월 8일 : 전기통신사업법 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 기자회견
- 2002년 10월 11일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자료 제작과 국회 배포
- 2002년 10월 11일 : [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한다!
- 2002년 10월 15일 : [성명]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는 인권침해이다! - <수호천사>에 대한 끼리끼리의 국가인권위 제소를 지지하며
- 2002년 10월 18일 : 집행위원회 5차 회의
- 2002년 10월 31일 : 제234회 국회 정보통신부소관 법률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패널 참석
- 2002년 11월 1일 : 토론회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2002년 11월 5일 : [성명]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위헌적 행정규제권한을 존속시킨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한다!

- 2002년 11월 9일 : 한일 공동워크숍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 2002년 11월 14일 : '2002 대통령 선거' 시민사회단체 공동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제안 기자회견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 2002년 11월 15일 : [성명] 경찰은 '안티창' 사이트 수사로 네티즌의 정치토론을 위축시키지 말라! - '안티창' 사이트는 네티즌의 정당한 정치 토론이다
- 2002년 11월 16일 : 진보네트워킹센터 2002 후원의 밤 행사 개최
- 2002년 11월 20일 : 운전면허시험장 지문날인 거부 행동지침 발표
- 2002년 11월 21일 : 활동가 워크숍 <정보기본권 현안과 과제>
- 2002년 11월 22일 : [성명]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검열을 중단할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출수 없다 - 대통령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발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메일 보내기 시작
- 2002년 11월 22일 - 23일 : 인권활동가워크숍 참가
- 2002년 11월 22일 - 24일 : WSIS : The Asian Response 참가. 태국 방콕
- 2002년 11월 26일 : [성명]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환영한다
- 2002년 11월 27일 : 국제 워크숍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노동감시입법 - 외국의 경험과 우리의 모색>
- 2002년 11월 27일 : [성명]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의 선거시기 표현에 대한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말라! - 선관위는 일반적인 정치의견표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 2002년 11월 30일 : 예비군 지문날인 거부 행동지침 발표
- 2002년 11월 30일 : 5대 지침 <내가 꼭 알아야 할 정보화시대의 인권> 발간 - 표현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반감시권, 정보공유의 권리, 정보접근권 등
- 2002년 12월 3일 : 지문날인 반대자 2002 대통령 선거 행동지침 발표
- 2002년 12월 4일 : [성명] 행정자치부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2002년 대선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2002년 12월 10일 : 시민사회단체 정보분야 공동 공약 제안 관련 후보자 답변 분석과 보도자료 발표
- 2002년 12월 10일 - 15일 : Asia Civil Society Forum 참가, 태국 방콕
- 2002년 12월 18일 : [성명]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BM 특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구한다! - 삼성전자의 '원격교육장치' BM 특허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

- 2002년 12월 30일 : [논평] 김인규 교사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03년

- 2003년 1월 3일 : [성명] 일본 정부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 SIS) 아시아 지역회의'에 북한을 초청해야 한다!
- 2003년 1월 13일 - 15일 : WSIS 아시아 지역회의 참가, 일본 도쿄
- 2003년 1월 17일 :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 2003년 1월 27일 : [성명] 한알에 23,045원의 약가결정, 제약특허권자의 이윤만을 보장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약가결정철회하라!
- 2003년 2월 : 메일링리스트 엔진 교체 및 서비스 업그레이드
- 2003년 2월 : 진보네트워크교육센터 교육장 정리 (사회단체 교육 서비스 중단)
- 2003년 2월 6일 : [성명] 중대한 인권침해, NEIS를 폐기하라!
- 2003년 2월 10일 : [기자회견] 특허청은 글리백강제 실시 허용하라 - 18일간의 농성을 마치며
- 2003년 2월 11일 : [토론회]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 SIS)' 2차 준비회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2003년 2월 16일 : 2003년 지문날인 거부자/반대자 워크샵 및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발간
- 2003년 2월 17일 - 28일 : WSIS 2차 준비회의 (PrepCom II) 참가
- 2003년 2월 18일 : [토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쟁점과 대안 토론회
- 2003년 2월 19일 : [기자회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제소 기자회견
- 2003년 2월 20일 : [성명]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 2003년 2월 25일 : KBS 열린채널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불가처분에 대해 항소
- 2003년 2월 26일 : [성명] 소리바다 서버운영 중지 확정판결에 반대한다
- 2003년 2월 28일 : 인터넷검열공대위, <2002 검열백서> 발간
- 2003년 2월 28일 : [논평]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과 노무현식 신자유주의
- 2003년 3월 5일 : 삼성전자 비즈니스모델 특허무효화소송에서 승소 확정
- 2003년 3월 7일 : [의견]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바라는 입장
- 2003년 3월 10일 : [논평]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 시행을 중단하고 교육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 2003년 3월 14일 : [성명] 특허청은 환자 두 번 죽이는 글리백 강제 실시 불

허결정 철회하라!

- 2003년 3월 18일 : [성명] 정보공유연대, 한솔 CSN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에 이의신청
- 2003년 3월 27일 : [성명]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회단체 의견서
- 2003년 3월 28일 : [성명]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일방적인 개최에 대한 항의성명
- 2003년 3월 28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2003년 정기 총회
- 2003년 3월 30일 : [논평]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 2003년 3월 31일 : [성명]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2003년 4월 6일 : [성명] 교육행정정보화강행을 중단하라! - 반쪽위원회를 네이스강행의 명분으로 내걸지 말라
- 2003년 4월 9일 : [토론회] WSIS 2차 준비회의(PrepCom 2) 보고대회 및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준비모임 1차 대표자회의
- 2003년 4월 12일 :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에 서버 기증
- 2003년 4월 15일 : [토론회]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 2003년 4월 17일 : [성명]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 2003년 4월 22일 : [토론회] 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 2003년 4월 24일 : 하드디스크 손상으로 인한 참세상공동체 자료실 장애
- 2003년 4월 29일 : [성명] 더 이상 동성애자들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몰지 말라!
- 2003년 5월 6일 : [성명]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들의 신분증 제한을 반대한다!
- 2003년 5월 6일 : [성명] 더 이상 동성애자들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몰지 말라!
- 2003년 5월 10일 : [워크숍]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공식 발족과 시민사회 워크숍 개최
- 2003년 5월 12일 : [성명]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와 내국인 지문날인 강제
- 2003년 5월 12일 : [논평] NEIS만이 문제가 아니다
- 2003년 5월 13일 : [성명] NEIS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 교육부는 수용하라
- 2003년 5월 16일 : [성명] 실명 확인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절대로 안된다
- 2003년 5월 19일 : [성명]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 게시판 실명

제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사용 웬말인가

- 2003년 5월 19일 :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문을 환영하며, 교육부는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2003년 5월 19일 : [기자회견] 국가인권위 권고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 2003년 5월 19일 : [성명]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을 사퇴하며
- 2003년 5월 21일 : [성명] NEIS문제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세력 싸움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 2003년 5월 21일 : 새만금살리기 삼보일배 배너 캠페인
- 2003년 5월 21일 : 참세상공동체, 014XY 모뎀 접속서비스 중단
- 2003년 5월 23일 - 24일 : [워크숍]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를 위한 한국포럼 공동 개최
- 2003년 5월 26일 : [논평] NEIS 갈등을 계기로 국민의 정보인권 보장하는 교육 정보화로 거듭나길
- 2003년 5월 26일 : [기자회견] NEIS 시행 저지를 위한 인권단체 긴급 기자회견
- 2003년 5월 26일 : [기획소송]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의 실명확인 서비스에 대한 고발
- 2003년 5월 28일 : [성명] 이제 자기정보통제권은 지켜져야 한다
- 2003년 5월 28일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 성명문 채택
- 2003년 5월 29일 : 월례포럼 <NEIS 이후 - 전자정부와 정보인권>
- 2003년 6월 :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웹호스팅 비용 인하
- 2003년 6월 1일 : [성명]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난다 - NEIS, 인권은 어디 갔는가
- 2003년 6월 4일 : [성명] 한국MS 고현진 사장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내정에 반대한다!
- 2003년 6월 4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회 회의(1차)
- 2003년 6월 7일 : [논평] NEIS 논쟁, 전자정부 전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시급하다!
- 2003년 6월 8일 : '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 발표
- 2003년 6월 18일 - 27일 : NEIS 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위한 인권단체활동가 200인 선언과 단식농성
- 2003년 6월 23일 - 27일 : [보도자료]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 기념 빅브라더 주간 집중행동
- 2003년 6월 24일 : [토론회] 정보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

- 2003년 6월 25일 :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25일 국가인권위 진정
- 2003년 6월 27일 : [토론회] NEIS 이후, 전자정부에서 정보인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2003년 6월 27일 : NEIS-졸업생 손해배상청구 2차 소송
- 2003년 7월 1일 - 25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 강좌>
- 2003년 7월 1일 : [성명]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 인권단체 공동성명, 운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강요하는 반인권적 불치벌협정을 거부해야 한다
- 2003년 7월 3일 : 월간 <네트워크> 창간
- 2003년 7월 4일 : [성명]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 부여 결사 반대 - 법 폐지를 위한 활동 나서겠다
- 2003년 7월 8일 : [기자회견] 네이스반대, 정보인권수호공대위 발족 기자회견
- 2003년 7월 10일 : 참세상공동체, 김하경이 들려주는 천일야화 오픈
- 2003년 7월 15일 - 18일 : WSIS Intersessional Meeting 참가
- 2003년 7월 17일 : [성명]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법제화 철회는 당연한 조치이다!
- 2003년 7월 18일 : [성명]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 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
- 2003년 7월 18일 : [성명]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정부간 선언문(안)의 보안 분야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 2003년 7월 24일 : [기자회견] 정부는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 2003년 7월 31일 : [기자회견] 노동 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동감시 근절 대책 촉구
- 2003년 8월 2일 - 23일 : 사법경찰권법 반대를 위한 시민선전전
- 2003년 8월 3일 : 월간 <네트워크> 2호 발간
- 2003년 8월 4일 : [논평] 감시 무법지대 한국 ...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시급하다
- 2003년 8월 10일 : 참세상 웹메일 서비스 개선
- 2003년 8월 12일/21일/26일 : [토론회] 연속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의 쟁점들
- 2003년 8월 21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회 회의(2차)
- 2003년 8월 29일 : [의견] 동성애사이트 엑스존 항소심에 탄원서 제출
- 2003년 9월 1일 : [토론회] 공유정보영역의 확대와 전자정부

- 2003년 9월 1일 : [성명]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선언의 의미 퇴색시키는 '8·30 결정' 반대한다! (WTO 칸쿠회의 관련)
- 2003년 9월 3일 : 월간 <네트워크> 3호 발간
- 2003년 9월 4일 : [기자회견]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합의안 타결을 반대하는 WTO반대투쟁단 기자회견
- 2003년 9월 5일 : 참세상, 서버 오류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
- 2003년 9월 8일 : [기자회견]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에 즈음한 NEIS공대위 및 참여단체의 입장
- 2003년 9월 8일 : 참세상 방송국 영상 페이지, Go RealMedia (<http://film.jinbo.net>)
- 2003년 9월 9일 : [의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지문날인반대연대 의견
- 2003년 9월 9일 : [의견]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 2003년 9월 10일 - 14일 : 멕시코 칸쿠회, WTO 반대 시위 참가
- 2003년 9월 15일 - 26일: WSIS 3차 준비회의 참가
- 2003년 9월 15일 : 칸쿠회 현지 농민 참가단 이정해 열사 사이버 분향소 (<http://nowto.jinbo.net>) 마련
- 2003년 9월 18일 : [의견] 인터넷 실명제, 행정자치부 입장 촉구
- 2003년 9월 19일 : [논평] 전자건강카드 추진에 부처
- 2003년 9월 22일 : [성명]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정보의 공개를 촉구한다!
- 2003년 9월 24일 : [성명-의견] 양성평등의 보장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 : 호주제 관련 민법개정안에 대하여
- 2003년 9월 28일 : [기자회견] 프라이버시 단체 국감 중간결산
- 2003년 9월 30일 : 비민주적으로 NEIS 시행을 결정한 학교 앞 1인 시위
- 2003년 9월 30일 : [기자회견]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 2003년 9월 : 정보트러스트 운동 참가
- 2003년 10월 1일 : [토론회]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교육 정보화 정책 방향
- 2003년 10월 3일 : 월간 <네트워크> 4호 발간
- 2003년 10월 6일 : [논평]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방침에 논평
- 2003년 10월 6일 : [의견]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 2003년 10월 8일 : [성명] 인권단체/이라크반전평화팀 공동성명서, 이라크 민중의 상황을 왜곡하지 말라

- 2003년 10월 9일 : [성명] 서울지역 대학교 입학처장협의회의 비교육적,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한다!
- 2003년 10월 9일 : 시민사회단체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청원 -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 2003년 10월 9일 : 송두율 처벌.추방 반대 페이지 (<http://freesong.jinbo.net>) 오픈
- 2003년 10월 11일 - 13일 : 네트워킹 2003 심포지움 참가, 일본 도쿄
- 2003년 10월 14일 : [토론회] WSIS 3차 준비회의(PrepCom 3) 참가 보고대회 개최
- 2003년 10월 15일 : [성명] 검찰, 영장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 취득
- 2003년 10월 15일 : [성명]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 2003년 10월 17일 : [성명] 인권사회단체, 검찰의 불법감청 확인
- 2003년 10월 20일 : 정보운동 페이지(<http://act.jinbo.net>) 및 월간 <네트워커> 페이지(<http://networker.jinbo.net>) 개통
- 2003년 10월 22일 : [성명] 전자주민증을 위한 인프라,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에 반대한다
 - 2003년 10월 24일 : [논평] 건대생 김용찬씨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에 부처
 - 2003년 10월 24일 - 26일 : 인권활동가대회 참가
 - 2003년 10월 28일 : "이제 디지털도 곧 역사가 됩니다" 캠페인 시작
 - 2003년 10월 28일 - 11월 6일 : 진보통신연합 APC 총회 참석
 - 2003년 10월 29일 : [기자회견]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긴급 기자회견
 - 2003년 11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5호 발간
 - 2003년 11월 5일 : [의견]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시민사회 의견서
 - 2003년 11월 5일 :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 2003년 11월 5일 : [성명]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처,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2003년 11월 6일 : [성명] 정보인권단체, 소리바다 판결에 성명 "이용자의 정보 향유 권리를 무시한 법원의 결정을 우려한다!"
 - 2003년 11월 10일 : [성명]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 2003년 11월 10일 : [성명] 비민주적인 사법경찰권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강력히 반대한다
 - 2003년 11월 10일 - 14일 : WSIS 3차 준비회의 연장회의(Prepcom IIIA)

참가

- 2003년 11월 13일 : [성명] 11.10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3당 합의안에 부처
- 2003년 11월 14일 : [성명]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 2003년 11월 14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 5주년
 - 2003년 11월 18일 : [기자회견] 인권의 죽음! 청와대 앞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2003년 11월 18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5주년 기념의 밤' 개최
 - 2003년 11월 19일 : [성명]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단속을 즉각 중지하라
 - 2003년 11월 20일 : [질의] 서울특별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 질의
 - 2003년 11월 24일 : [의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2003년 11월 25일 : [성명] 감시와 통제의 결정판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 2003년 11월 25일 : [토론회] 정보 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 2003년 11월 25일 : [성명] 강철민 이병을 지지하는 인권단체 공동성명, "침략전쟁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파병계획 철회하라"
 - 2003년 11월 27일 : [성명]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 2003년 11월 27일 : [입장] NEIS 공대위, 정책 제안 발표
 - 2003년 11월 28일 : [성명] 'NEIS CD 제작배포 금지'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2003년 12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6호 발간
 - 2003년 12월 3일 : 노숙인 지원사업 정책 세미나 "사회복지 서비스 기록과 정보인권 보호" 참석
 - 2003년 12월 8일 : [성명] 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 2003년 12월 9일 : [성명] 노바티스의 탐욕은 어디까지인가? 글리벡의 인도 내 독점판매권부여 철회하라
 - 2003년 12월 10일 : [기자회견]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사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2003년 12월 10일 : 정보인권 영문 홈페이지 개통
 - 2003년 12월 10일 -12일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참가, 스위스 제네바
 - 2003년 12월 11일 : [성명]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

체의 입장

- 2003년 12월 15일 : [성명] 교육정보화위원회의 NEIS 대안 시스템을 환영하며
- 2003년 12월 16일 : 민주노총 서울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에 감사패 전달
- 2003년 12월 17일 : [성명]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의 통과에 반대한다!
- 2003년 12월 18일 : [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동성애 검열을 중단하라
- 2003년 12월 19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회 회의(3차)
- 2003년 12월 24일 : 인권단체, 4대 악법 철폐를 요구하며 국회 앞 기습 시위
- 2003년 12월 29일 : [성명] 수사과정에서 지문날인 남용을 중단하라 - 인권단체 공동성명
- 2003년 12월 29일 : [성명]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2004년

- 2004년 1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7호 발간
- 2004년 1월 15일 : [성명] 가사사이트에도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법적 난도질?
- 2004년 1월 16일 : 노동자감시 대응 지침서 발간
- 2004년 1월 19일 :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2004년 1월 20일 : [성명] 미국의 지문 채취를 강력히 규탄한다!
- 2004년 1월 28일 : [성명]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계시관 실명제 있을 수 없다
- 2004년 2월 6일~4월 16일 : 정보인권 공개세미나
- 2004년 2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8호 발간
- 2004년 2월 5일 : 운영위원회 1차 회의
- 2004년 2월 5일 : [기자회견] 인권단체는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 2004년 2월 10일 : [성명]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 2004년 2월 10일 : [성명] 정보인권 침해하는 선거계시관 국가 실명제, 국회는 지금이라도 철폐하라!
- 2004년 2월 14일 : 진보넷 초기 대표이신 고 김진균 선생님 별세
- 2004년 2월 16일 : [기자회견] 인터넷 실명제 철폐를 촉구하는 인터넷 언론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2004년 2월 18일 : 2004년 총회 개최, 이종희 신임대표 선출
- 2004년 2월 19일 : 63개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 1차 발표
- 2004년 2월 20일 : 인터넷 실명제 2차 불복종선언
- 2004년 2월 23일 : [기자회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동성애조항 삭제추구를 위한 기자회견
- 2004년 2월 24일 : [의견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 2004년 2월 25일 : [성명] 인터넷 실명제로 주민등록번호가 위험하다!
- 2004년 2월 25일 : 인터넷 실명제 3차 불복종선언
- 2004년 3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9호 발간
- 2004년 3월 3일 : [성명]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2004년 3월 3일 : [성명] 정부는 한해살이 위헌법률 개악 집시법을 강행할 것인가
- 2004년 3월 10일 : [기자회견] 인터넷언론·시민사회,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선언 기자회견
 - 2004년 3월 12일 :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 2004년 3월 15일 : 총선 이슈사이트 another0415.net 오픈
 - 2004년 3월 18일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2004년 3월 19일 : [정세토론회] '민중탄핵이다!' 개최
 - 2004년 3월 24일 : [성명] 인터넷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확인 금지를 환영한다!
 - 2004년 3월 30일 : [성명] 송두율 교수 중죄 선고를 규탄한다
 - 2004년 3월 30일 : [성명]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 2004년 4월 2일 : 민중의스승 고(故) 김진균 선생님 49재
 - 2004년 4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10호 발간
 - 2004년 4월 8일 : 사무실 이전 (갈월동 -> 청파동)
 - 2004년 4월 20일 : [성명] 유전자 DB,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 2004년 4월 23일 - 25일 :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 개최
 - 2004년 4월 26일 : [성명]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2004년 4월 30일 : [성명]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범죄자 취급
 - 2004년 4월 30일 : [논평]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된 것에 환영
 - 2004년 5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11호 발간
 - 2004년 5월 7일 : 운영위원회 2차 회의
 - 2004년 5월 7일 : 새 사무실 집들이
 - 2004년 5월 10일 : [성명]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 2004년 5월 12일 : [토론회] FTA와 의약품 접근권/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
 - 2004년 5월 19일 : [토론회]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공개 토론회
 - 2004년 5월 22일 : 지문날인 반대자 걷기 모임
 - 2004년 5월 24일 : [성명] 정부는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

정을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 2004년 5월 24일 : [성명] MP3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 2004년 5월 27일 : [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
 - 2004년 6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12호 발간
 - 2004년 6월 7일 : '참세상방송국'을 '미디어참세상'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편
 - 2004년 6월 10일 : [기자회견]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 2004년 6월 14일 : [성명] 지문정보의 민간제공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2004년 6월 16일 : [성명]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 2004년 6월 18일 : [기자회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2004년 6월 18일 : [토론회] '노동자 정치운동 새로운 연대를 위하여' 개최
 - 2004년 6월 23일 : [성명]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확장을 경계한다
 - 2004년 7월 1일 : [토론회] 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과제와 전망
 - 2004년 7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13호 발간
 - 2004년 7월 7일 : [토론회] KT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증언 대회
 - 2004년 7월 8일 : 블로그 데모판 오픈
 - 2004년 7월 8일 : 자료집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꼽은 17대 국회 정보인권 과제> 발간
 - 2004년 7월 12일 : [성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조속 개정 반대한다
 - 2004년 7월 13일 : [성명] 과학수사라는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 감식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 2004년 7월 13일 : [성명] 교육부, 개인정보 대량 유출 규탄 성명서
 - 2004년 7월 13일 : [기자회견] 삼성SDI 노동자감시 및 정보인권유린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2004년 7월 14일 : [토론회]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 2004년 7월 22일 : [기자회견]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 2004년 7월 27일 : 진보 블로그 공식 오픈

- 2004년 8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14호 발간
- 2004년 8월 9일 : [성명] 경찰은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수록관행을 당장 중단하라!
- 2004년 8월 11일 : [성명] KR도메인 공급가격 인하하고 공정경쟁 실현
- 2004년 8월 18일 : [토론회] 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하나
- 2004년 8월 25일 : [기자회견]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 단진정운동 기자회견
- 2004년 9월 : 통합인증, 웹기반으로 참세상 공동체 개편
- 2004년 9월 1일 : '미디어참세상' 뉴저네트워크 오픈
- 2004년 9월 1일 : '미디어참세상' 디카사이트 오픈
- 2004년 9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15호 발간
- 2004년 9월 3일 : [성명] SK텔레콤의 MP3폰 재생시간 해제 결정은 당연하다.
- 2004년 9월 5일 : [성명] NEIS를 즉각 중단하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2004년 9월 15일 : [성명]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 2004년 9월 23일 : 운영위원회 3차 회의
- 2004년 9월 23일 :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 공청회 개최
- 2004년 9월 24일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2004년 10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16호 발간
- 2004년 10월 4일 : 정보공유라이선스 홈페이지(<http://freeuse.or.kr>) 오픈
- 2004년 10월 8일 : 성폭력 예방교육(1차)
- 2004년 10월 15일 : [성명] FBI, 독립미디어센터(IMC)에 대한 국제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 2004년 10월 20일 : [논평]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을 촉구한다!
- 2004년 10월 20일 : 진보 블로그, 자가중신 블로거진 RSS 피드 제공
- 2004년 10월 21일 : '미디어참세상' 참세상뉴스 배포
- 2004년 10월 22일 : 성폭력 예방교육(2차)
- 2004년 10월 22일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 2004년 11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17호 발간

- 2004년 11월 5일 : 진보 블로그, 트랙백 서비스 개시
- 2004년 11월 5일 : [토론회]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
- 2004년 11월 5일 : [토론회]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 2004년 11월 18일 : [성명]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친북사이트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
- 2004년 11월 22일 : [성명] 교육부는 여전히 NEIS를 꿈꾸고 있는가?
- 2004년 11월 22일 : [의견서] 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2004년 11월 25일 : [성명]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환영
- 2004년 12월 1일 : 6주년 기념의 밤 개최
- 2004년 12월 2일 : [성명]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에 대한 항의 성명
- 2004년 12월 2일 : [의견서] 위치정보보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2004년 12월 2일 : 정보통신부의 소위 '친북사이트 차단조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제출
- 2004년 12월 3일 : 피플파워 첫 방영
- 2004년 12월 3일 : [논평]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처리 미룰 이유 없다
- 2004년 12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18호 발간
- 2004년 12월 8일 : 근골격계 교육, 건강검진
- 2004년 12월 10일 : [성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 2004년 12월 15일 : [의견서]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2004년 12월 17일 : [성명] 부당노동행위, 노동자감시가 신노사문화인가?

2005년

- 2005년 1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19호 발간
- 2005년 1월 10일 : [알림] 김진균 기념사업회, 기틀을 놓는 데 함께해주세요
시오
- 2005년 1월 13일 : [논평] 소리바다 무죄판결의 의미
- 2005년 1월 13일 : [성명] 목적별 편제 방식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주장한다!
- 2005년 1월 14일 : [성명] 행정자치부는 지문날인 강요하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하라
- 2005년 1월 14일 : [성명] 새로운 신분등록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충실해야
- 2005년 1월 17일 : [성명]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 2005년 1월 17일 : [공지] 블록, 나의 즐겨찾기 [추가] 버튼 개설
- 2005년 1월 21일 : [토론회]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 2005년 1월 25일 : [의견]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 2005년 2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20호 발간
- 2005년 2월 14일 : [보도자료]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공동성명서 발표 및 저작권법 불복종 캠페인 <대통령에게 애국가 선물하기·배경음악 들려주기> 개시
- 2005년 2월 15일 : [보도자료] 공공기관 홈페이지 34% 주민등록번호 노출
- 2005년 2월 16일 : [성명] 삼성노동자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검찰의 수사중단 규탄한다!
- 2005년 2월 17일 : [성명]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라!
- 2005년 2월 21일 :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밝히고 국회앞 1인 시위
- 2005년 3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21호 발간
- 2005년 3월 9일 : [기자회견] 전자정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규탄 기자회견
- 2005년 3월 10일 : [논평] 실망스런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2005년 3월 17일 : [알림] 주민등록번호 2차 실태조사 보고서와 관련한 사과 및 요청사항
- 2005년 3월 29일 : [성명]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

권법 전문개정안의 4월 국회발의를 반대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 2005년 3월 30일 :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라!
- 2005년 4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22호 발간
- 2005년 4월 7일 : [논평] 국가인권위의 도서관무인좌석발급기 권고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논평
- 2005년 4월 7일 : [알림]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진정서에 함께해주세요
- 2005년 4월 11일 : [성명] 검찰의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제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무혐의 결정을 규탄한다
- 2005년 4월 12일 : [의견]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 2005년 4월 13일 : [논평]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 2005년 4월 19일 : [성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2005년 4월 21일 : [성명]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DB를 즉각 폐기하라!
- 2005년 4월 26일 : [의견]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 2005년 4월 27일 : [성명] 저작권 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 2005년 4월 27일 : [기자회견]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 2005년 5월 1일 : 블로그 공동 운영 - 팀블로그 개발
- 2005년 5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23호 발간
- 2005년 5월 3일 : [보도자료] 지문날인제도 위헌소송 헌법소원 당사자 추가
- 2005년 5월 10일 : [성명] 특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2005년 5월 23일 : [성명] 브라질정부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 2005년 5월 24일 : [기자회견] 30대 대기업 입사지원 시 가족정보 수집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발표 기자회견
- 2005년 5월 27일 : [성명]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대변인인가?
- 2005년 6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24호 발간
- 2005년 6월 9일 : [기자회견]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 2005년 6월 13일 : [성명]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2005년 6월 16일 : [의견]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 2005년 6월 20일 : [논평] 정부는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 2005년 6월 22일 : [토론회]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 개최
- 2005년 6월 23일 : [성명]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 SIS) 주제별 회의의 비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비판한다.
- 2005년 6월 29일 : [성명]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서
- 2005년 7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25호 발간
- 2005년 7월 7일 : [기자회견]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인가?
- 2005년 7월 12일 : [알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2005년 7월 14일 : [의견]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2005년 7월 22일 : [성명]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 2005년 7월 22일 : [의견]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대학 입시요강에 대한 의견서
- 2005년 8월 1일 : [논평] 대법원의 반문화적 결정에 반대한다.
- 2005년 8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26호 발간
- 2005년 8월 4일 : [알림] 정보통신부의 생체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자를 모집합니다
- 2005년 8월 9일 : [기자회견]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 규탄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마련 촉구 기자회견
- 2005년 8월 18일 : [알림] "지식 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가 개최됩니다.
- 2005년 8월 18일 : [논평]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2005년 9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27호 발간
- 2005년 9월 5일 : [알림]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발표하며
- 2005년 9월 6일 : [성명] 소리바다3 사용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
- 2005년 9월 6일 : [의견서] 국가인권위 영치금 수령시 강제 지문날인 강요 개정 권고 촉구

- 2005년 9월 8일 : [기자회견] 실효성없는 강남구 CCTV 설치확대 규탄 기자회견
- 2005년 9월 9일 : [알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성노동운동민중연대'와 아무런 조직적 관계가 없습니다
- 2005년 9월 13일 : [성명]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 2005년 9월 21일 : [기자회견] 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2005년 9월 23일-24일 : 2005 대학정보인권포럼 개최
- 2005년 10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28호 발간
- 2005년 10월 6일 : [기자회견]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 2005년 10월 11일 : [기자회견]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발족식
- 2005년 10월 11일 : [알림] 2005 빅브라더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 2005년 10월 11일 : [성명] 국회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라!
- 2005년 10월 25일 : [성명] 정부는 타미플루 강제실시와 국영백신생산시설 설립을 포함한 조류독감대책을 마련하라!
- 2005년 11월 1일 : 모블로깅 시험서비스(베타서비스) 시작
- 2005년 11월 2일 : 2005 정기국회 정보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 2005년 11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29호 발간
- 2005년 11월 3일 : [보도자료] 2005 빅브라더상 후보 공모 종료
- 2005년 11월 8일 : [성명]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2005년 11월 14일 : [성명] 검경의 신원확인 유전자 DB구축은 새로운 국가감시 시스템 도입의 서막이다
- 2005년 11월 15일 : [보도자료]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홍보 퍼포먼스 및 빅브라더상 주제곡 발표
- 2005년 11월 15일 : [의견] "특허권의 수용,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05년 11월 18일 : [성명]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2005년 11월 22일 :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개최
- 2005년 11월 22일 : [기자회견] 질병관리본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전면 거부하라.
- 2005년 11월 25일 : [성명]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당장 철회하라!
- 2005년 12월 3일 : 월간 <네트워커> 통권 30호 발간

- 2005년 12월 7일 : [성명]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 단체 공동 규탄성명
- 2005년 12월 29일 :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 범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2006년

- 2006년 1월 19일 :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 2006년 1월 26일 : [알림] 진보블로그 메인 페이지 개편
- 2006년 2월 16일 : [성명] 프라이버시 침해, 예산 낭비,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 2006년 2월 16일 : [논평] 리니지 명의도용, 주민번호 민간 이용 금지해야!
- 2006년 2월 19일 :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촉구 공개서한
- 2006년 2월 27일 : [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 재개에 대한 입장
- 2006년 3월 3일 : 월간<네트워커> 통권 31호 발간
- 2006년 3월 3일 : [의견]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 2006년 3월 15일 : [알림] 진보블로그 편집기 추가
- 2006년 3월 30일 : [보도자료] 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저작권 부문 USTR 의견서 제출
- 2006년 3월 30일 : [보도자료] 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USTR 의견서 제출
- 2006년 4월 3일 : 월간<네트워커> 통권 32호 발간
- 2006년 4월 6일 : [보도자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 2006년 4월 13일 : [보도자료]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립니다
- 2006년 4월 17일 : [기자회견]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와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2006년 4월 18일 : [기자회견] 선거계시판 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사, 인권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
- 2006년 4월 21일 : [기자회견]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2006년 4월 24일 : [성명] '우상호 네티즌 죽이기 법안', 국회 법사위 논의 재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2006년 5월 3일 : 월간<네트워커> 통권 33호 발간
- 2006년 5월 3일 : [성명]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 2006년 5월 10일 : [보도자료]한미FTA저지 지재권 분야 대책위, 외교통상부에 의견서 제출
- 2006년 5월 17일 : [성명] 불법을 자행하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 2006년 5월 19일 : [알림] 월간 <네트워커> 홈페이지 개편
- 2006년 5월 22일 : [성명] 대추리/도두리 주민감시 CCTV, 당장 철거하라!
- 2006년 5월 24일 : [문화제]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 대중문화제
- 2006년 5월 30일 : [보도자료] '민중의 소리'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및 선거실명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 2006년 6월 2일 : [성명]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WHO의 R&D협약 결정에 따라 의약품 접근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
- 2006년 6월 3일 : 월간<네트워커> 통권 34호 발간
- 2006년 6월 7일 : [성명] 정말로 악취가 진동하는 곳은 어디인가? - 시대착오적인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2006년 6월 15일 : [기자회견] 보건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다국적제약협회 입장에 반대한다.
- 2006년 6월 22일 : [한국&국제NGO 공동성명] 전세계 민중 건강권의 장애물이 되는 한미FTA 반대한다.
- 2006년 7월 3일 : 월간<네트워커> 통권 35호 발간
- 2006년 7월 4일 : [기자회견]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 예방이다
- 2006년 7월 5일 : [성명] 정보통신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행동에 나서라
- 2006년 7월 12일 : [성명]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 2006년 7월 19일 : [성명]공공제도가 기업이익에 따라 흥정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 2006년 7월 27일 : [알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적 지위(UN ECOSOC consultative status) 획득
- 2006년 8월 3일 : 월간<네트워커> 통권 36호 발간
- 2006년 8월 22일 : [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 2006년 8월 25일 : 2006 전국정보운동포럼 개최

- 2006년 9월 3일 : 월간<네트워커> 통권 37호 발간
- 2006년 10월 3일 : 월간<네트워커> 통권 38호 발간
- 2006년 10월 25일 : [입장] 동아일보, "'北 핵보유 정당화' 친북서적 나돈다"(10월 17일자) 기사 내용 중 오보에 대한 사과 및 정정보도 요청
- 2006년 10월 27일 : [성명] 한미FTA지재권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 2006년 11월 1일 : [국회의견서]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서
- 2006년 11월 3일 : 월간<네트워커> 통권 39호 발간
- 2006년 11월 13일 : [보도자료]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2006년 11월 15일 : [기자회견] 약제비절감방안을 무력화시키고 약가폭등을 부르는 한미 FTA의약품 협상을 중단하라
- 2006년 11월 16일 : [토론회] 저작권 강화와 공동체의 위기 - 보호기간 연장 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 2006년 11월 19일 : [토론회]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2006년 11월 27일 : [성명]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 2006년 11월 28일 : [성명]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 2006년 12월 3일 : 월간<네트워커> 통권 40호 발간
- 2006년 12월 27일 : [성명] 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2007년

- 2007년 1월 17일 : [보도자료] 국민의 생명은 FTA의 거래조건도 '빅딜'의 대상도 아니다"
- 2007년 2월 23일 : 전자여권 도입일 위한 공청회 참가
- 2007년 2월 27일 : [보도자료]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예이즈예방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2007년 2월 28일 : 한미FTA 협상 중단 호소문 시리즈 시작
- 2007년 3월 8일 : [성명] 전자여권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 2007년 3월 28일 : [보도자료] 지적권을 전리품으로 갖다 바치는 한미 FTA 협상 견어 치워라!
 - 2007년 3월 30일 : [성명]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
 - 2007년 4월 1일 : [보도자료]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협상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일방적인 상납이다!
 - 2007년 4월 3일 : 인권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 2007년 4월 5일 : [성명] 퍼주기로 일관한 저작권 협상, 실효성없는 사후대책, 문화관광부는 문화를 포기했나?
 - 2007년 4월 10일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전국민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는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 2007년 4월 17일 : [기자회견] 통신비밀의 보호,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 2007년 4월 26일 : 애보트의 태국에서의 시장철수에 항의하는 국제 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
 - 2007년 5월 1일 : 정보운동포털 액트온 오픈
 - 2007년 5월 1일 : 진보넷 웹진 액트온 오픈
 - 2007년 5월 2일 :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평가 토론회
 - 2007년 5월 16일 : 메타블로그 폴로그 공식오픈
 - 2007년 5월 28일 : 한미FTA 저작권/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성명 기자회견 개최
 - 2007년 5월 21일 : 의약품 접근권 이슈 대응을 위한 상설 연대체 논의 워크숍
 - 2007년 5월 22일 : [성명] 전자여권은 생체여권이다
 - 2007년 5월 31일 : 여성주의 미디어운동 연구팀, <여성, 미디어로 전복을

꿈꾸다> 발간

- 2007년 6월 4일 : 정부의 '한미FTA 허가-특허 연계 조항'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 2007년 6월 5일 : 인권단체 연석회의 '생체여권에 대한 공개질의'
 - 2007년 6월 5일 :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2007년 6월 11일 :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검토 의견서 발표
 - 2007년 6월 14일 : 미디어 융합 대응 TF 구성 (진보넷, 미디어액트, 참세상, 한독협, 전미네, 장미네, RTV 등)
 - 2007년 6월 19일 : 한미FTA 국회 청문회
 - 2007년 6월 20일 : 계간 정보운동 액트온 창간호 발행
 - 2007년 6월 20일 :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한미FTA 협정문 종합 분석 보고서 발간
 - 2007년 6월 22일 : [성명] 국민에 대한 감시·사찰 일상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규탄한다!
 - 2007년 6월 27일 :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감시, 통제 실태 개선을 위한 토론회
 - 2007년 7월 2일 : 전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내모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 2007년 7월 4일 : [성명]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2007년 7월 4일 : [기자회견] 중앙선권위는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새 기준을 제시하라!
 - 2007년 7월 6일 : 한국사회포럼 주제토론 -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전망 및 대응
 - 2007년 7월 7일 : 한국사회포럼 주제토론 - 강화되는 인터넷 감시통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2007년 7월 24일 : 헌법소원 청구인 사이버 모집 <http://freeucc.jinbo.net> 개통
 - 2007년 7월 25일 : [기자회견]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하라!
 - 2007년 7월 25일 : 인권시민사회단체 정통부 삭제 권고 규탄 성명
 - 2007년 7월 26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초강력 인터넷 통제 - 정보통신망법 개정 규탄과 제44조 등의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 2007년 7월 27일 : 블로그 3주년 파티
 - 2007년 8월 7일 : '생체여권과 인권' 세미나 개최

- 2007년 8월 28일 : 포털사이트 이랜드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규탄 성명 발표, "이랜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이 명예훼손일 수 없다"
- 2007년 9월 4일 : 네티즌 192명과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 2007년 9월 6일 : 일본 입국 외국인 지문 채취 반대 기자회견
- 2007년 9월 7일 : [성명]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2007년 9월 12일 :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규탄 기자회견
- 2007년 9월 13일 : 여성주의 미디어운동 연구팀, '여성주의 미디어운동 포럼'
- 2007년 9월 19일 : 국회 통외통위 '전자여권 도입에 관한 공청회' 참석
- 2007년 9월 28일 :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릴레이 칼럼 시작
- 2007년 10월 1일 : 생체여권 대응팀 홈페이지 <http://biopass.jinbo.net> 오픈
- 2007년 10월 4일 : [성명] 한EU FTA 3차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 2007년 10월 18일 : 한EU FTA 범국본 워크숍 발제
- 2007년 10월 20일 : 계간 정보운동 액트온 제2호 발행
- 2007년 10월 21일 : 생체여권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 2007년 10월 23일 : 한미 FTA 대응 특허법 개정안 제출(임종인 의원 대표 발의)
- 2007년 10월 26일 : 한미 FTA 관련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 2007년 11월 6일 : 한미 VWP 협상 관련 [기자회견] 국민들의 개인정보로 미국비자 구걸하지 마라!
- 2007년 11월 6일 : 범민련 남측본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진보넷 입장 발표
- 2007년 11월 14일 : 진보넷 아홉번째 생일잔치, 영화상영 및 회원번개
- 2007년 11월 20일 : 일본 입국 외국인 지문채취에 대한 세계 72개 인권시민단체 항의서한 발표
- 2007년 11월 20일 : [기자회견] 올해에도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 2007년 11월 20일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NGO 반박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간담회
- 2007년 11월 22일 :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의견서 발표
- 2007년 11월 23일 : [성명] 2007 대통령 선거... 인터넷에 물린 재갈을 풀자!
- 2007년 11월 23일 : [기자회견]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개정하

라

- 2007년 11월 28일 : [성명] 미국의 열손가락 지문채취에 부처
- 2007년 11월 28일 :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2007년 11월 29일 : HIV/AIDS 감염인 인권문화제 '인권을 말할 법도 한덱 Show'
- 2007년 12월 11일 : ICESCR NGO 반박 보고서 작성 1차 연대회의
- 2007년 12월 12일 : 정보인권 만화프로젝트 '정보인권에 접속하다' <http://toon.jinbo.net> 오픈
- 2007년 12월 12일 : [논평] 소리바다5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 2007년 12월 20일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평가 전문위원 간담회(1차)
- 2007년 12월 21일 : UN 인권이사회(HRC) 보편적 정례 검토(UPR) 보고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

2008년

- 2008년 1월 16일 : [논평]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대한 논평
- 2008년 1월 18일 :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 2008년 1월 24일 : [보도자료] 인권 블로거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 2008년 1월 30일 : [보도자료]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 2008년 2월 5일 : [보도자료] 전자여권에 지문수록 2년 유예, 조삼모사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 2008년 2월 12일 : [성명] 한나라당의 방송통신위원회법안에 대한 입장
- 2008년 2월 12일 : [미디어행동]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출범 선언문
- 2008년 2월 13일 : [보도자료] 사전선거운동 허용,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국회의원 면담 개최
- 2008년 2월 14일 : [성명] 지문날인 생체여권 통외통위 통과를 규탄한다!
- 2008년 2월 25일 : [보도자료] 졸속강행되는 여권법 개정안 반대한다!
- 2008년 2월 27일 : [성명] 지문날인 생체여권 국회통과 규탄한다!
- 2008년 3월 7일 : [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5탄 : 지적재산권 집행
- 2008년 3월 25일 : [기자회견] 2008년 총선에도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한다
- 2008년 3월 28일 : [보도자료] 진보넷이 운영하는 댓글 게시판 통해 익명의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 2008년 3월 31일 : [보도자료] 지문날인 거부 청소년 여권 발급받아
- 2008년 4월 2일 : [성명] 익명으로 말할 권리
- 2008년 4월 4일 : [보도자료]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2008년 4월 11일 : [성명]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전화기 녹취기능 논란에 대하여 철저히 해명하라!
- 2008년 4월 22일 : [보도자료] 전자여권 반대한다!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
- 2008년 4월 24일 : [성명]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바로 보는 네 가지 입장
- 2008년 4월 30일 : [보도자료] 북한게시물 삭제 명령 거부로 인한 경찰 출석에 즈음한 성명발표 보도자료
- 2008년 5월 2일 : [기자회견] 옥선과 하나로텔레콤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 2008년 5월 8일 : [의견] IPTV 시민단체 의견서
- 2008년 5월 13일 : [미디어행동 기자회견] 청와대는 'PD수첩' 고소·고발 방침을 즉각 철회 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 2008년 5월 16일 : [기자회견] 근본적 아동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여성·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2008년 5월 19일 : [기자회견] 공공기관 CCTV 실태에 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 2008년 5월 20일 : [보도자료]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2008년 5월 20일 : [논평] VWP 양해각서에 대한 논평
- 2008년 6월 2일 : [성명] 이명박 정부는 일체의 인터넷 통제 시도를 중단하라!
- 2008년 6월 17일 : [기자회견] OECD 장관회의를 맞아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과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 2008년 6월 17일 : [성명] 인터넷 강국? 한국은 인터넷 정책의 후진국이다.
- 2008년 6월 17일 : [의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서
- 2008년 6월 18일 : [논평] 무엇을 위한 저작권인가? - 나우콤 사장 구속 사태로 본 저작권법의 남용
- 2008년 6월 19일 : [미디어행동] 이명박 정권, 전방위적 인터넷통제 중단하라!
- 2008년 6월 20일 : [성명]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정치적인 인터넷 통제를 중단하라!
- 2008년 6월 26일 : [보도자료]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대한 OECD 장관회의에 제출하는 시민사회-노동계 "서울 선언문"
- 2008년 7월 1일 : [기자회견] 방통심의위는 제 권한도 아닌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심의에서 손을 떼라
- 2008년 7월 2일 :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력 보위를 위한 검열 기관
- 2008년 7월 3일 : [성명] 행정안전부의 6.27 개인정보보호법 공청회에 대한 입장
- 2008년 7월 8일 : [성명] 정치 검찰은 네티즌 탄압을 중단하라!
- 2008년 7월 10일 : [열린문서 캠페인]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열린문서를 만들자!
- 2008년 7월 14일 : [의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고시제정안에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2008년 7월 16일 : [보도자료] 진보넷, 포털에 네티즌 게시물 삭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
- 2008년 7월 16일 : [열린문서 캠페인] '열린 문서'로 문서의 가치는 쑥 올리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센스까지.
- 2008년 7월 16일 : [기자회견]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헌법소원 제기
- 2008년 7월 16일 : [미디어행동 성명] 검찰, 피해자의 고소 중용!
- 2008년 7월 18일 :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 2008년 7월 21일 : [성명]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 2008년 7월 23일 : [성명] 인터넷 통제 야욕 숨기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
- 2008년 7월 24일 :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 2008년 7월 29일 : [열린문서 캠페인] 리눅스를 쓰고 싶어요...
- 2008년 8월 5일 : [성명]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은 인권침해 굴욕외교이다!
- 2008년 8월 5일 : [의견]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2008년 8월 7일 : [기자회견] 128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정치인, 광고주 목록 직접 올린다
- 2008년 8월 7일 : [보도자료] 방통심의위 결정에 민사 가처분 소송 제기
- 2008년 8월 14일 : [열린문서 캠페인] PDF 문서 만들기, 어렵지 않아!
- 2008년 8월 18일 : [성명]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환자들을 마루타로 내어줄 것인가
- 2008년 8월 19일 : [기자회견]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2008년 8월 21일 : [의견]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의견서
- 2008년 8월 21일 : [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통제를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조항들을 즉각 삭제하라!
- 2008년 8월 21일 : [성명] 누리꾼 구속 수사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입장
- 2008년 8월 25일 : [논문] 인터넷 실명제와 정보인권
- 2008년 8월 27일 : [보도자료] 언론시민사회단체, 방송통신심의위의 공개질의 회신 불가 방침에 입장 밝혀

- 2008년 8월 28일 : [의견]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2008년 9월 3일 : [인권단체 성명] 촛불시위 네티즌 구속은 민주주의를 구속하는 것이다
- 2008년 9월 10일 : [기자회견]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 2008년 9월 10일 : [의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08년 9월 17일 : [보도자료] 국제 시민사회단체들, 비밀리에 진행되는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의 공개를 요구하다!
- 2008년 9월 18일 : [토론회]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2008년 9월 30일 : [기자회견] 개인정보 생중계하는 전자여권 리콜하라!
- 2008년 10월 1일 : [논평] 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 폭증
- 2008년 10월 2일 : [보도자료] 유명환 장관의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
- 2008년 10월 6일 : [보도자료]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는 방법
- 2008년 10월 6일 : [인권단체/미디어행동 성명] 소위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 2008년 10월 6일 : [보도자료] 전자여권을 위변조하는 방법
- 2008년 10월 7일 : [보도자료] 전자여권 왜 도입했나?
- 2008년 10월 23일 : [논평]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무지와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문화체육관광부
- 2008년 11월 1일 : [성명]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2008년 11월 6일 : [미디어행동성명] 정부여당은인터넷을통제하려는공공이를 즉각 중단하라!
- 2008년 11월 11일 : [기자회견] 사이버 모욕죄 반대 전문가 선언 발표
- 2008년 11월 12일 : [기자회견] 사이버통제3대악법저지 공동행동 선포식

진보네트워크센터 10년 백서
: 자유와 공유의 연대기

- 발행일 : 2008년 11월 14일
- 발행인 : 이종희
- 발행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우편번호 120-840)
- 전화 : 02-774-4551
- 팩스 : 02-701-7112
- 홈페이지 : <http://www.jinbo.net>